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02
VOL. 675

한 해의 첫 달을 보내고 나면
꾸준함이 얼마나 큰
미덕인지 깨닫게 되지요.
세워뒀던 계획을 흐트러짐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금 다짐을 해 봅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2023. February
Vol. 675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2월 1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박장호 위원장(입법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법제실장)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한주연(비서관), 윤희진(비서관), 이구형(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04 지금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 위촉식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23 특집 - 경제복합위기의 현황과 대응방안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제안보’ 정책 수립해야

_이효영 교수

제도 혁신으로 국가경쟁력 높이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도성장 달성 방안 마련

_강성진 교수

가계채무와 주거비용 경감시키려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돼야

_김미루 연구위원

고부채와 대외건전성 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와 조화로운 정책응용이 중요

_정영식 선임연구위원

32 위원장에게 듣는다_주호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생산적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운영할 것”

34 길에서 길을 찾다_김영식 의원

구미, 산업 중심지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형 성장 도시로

38 나의 인생 나의 정치_김민석 의원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

40 칭찬합시다_강대식 의원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42 의원의 좌우명_고영인 의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CONTENTS



32



34



38



40



42

- 44** **함께하는 국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개최
- 46** **법률, 시대를 읽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_송주아 수석전문위원
- 48**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올바른 플랫폼 정책, 원전 안전 대책,
소년범 처우 개선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53** **국회의 꽃꽂이 나무 이야기**
고로쇠나무
- 54** **의회외교 포커스**
국익 위한 의회외교 활동,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_박진 장관
- 56** **주재관 리포트**
숙의(熟議)를 위한 헌법개정 방식 _조승래 주재관
- 60** **위원회는 지금**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청문회·공청회 실시 등
- 64** **국회 뉴스**
- 69** **이달의 청원**
- 70** **법 시행 그 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72** **만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74**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어느새 클라우드 세상에 살고 있다 _김동철 박사
- 76** **국회 사람들**
내가 행정부 대신 국회에서 일하는 이유 _조재순 보좌관
- 78** **이달의 서평**
독일은 왜 잘하는가 _구춘권 교수
- 80** **고전에서 읽는 지혜**
충무공 이순신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_박석무 석좌교수
- 82** **국회 미술관**
'신시'에 담긴 생명 평화의 서사 _김준기 미술평론가
- 85**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 86**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전염병, 제헌국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_조미경 속기사무관
- 88**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영암 월출산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
- 92** **생활 속 우리말글**
서술어의 주체를 분명히 살피자 _김풍기 교수
- 94** **정치 관련 주요 일지**

“선거제 개혁, 개헌 논의 본격 착수해야”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이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 및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집중토론, 국민 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선거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이 석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모두 확정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 완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 한 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기후·인구위기 대응,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Q. 최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개헌 등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새해 국회 운영 목표 중 가장 우선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2022년도 국회가 상당히 다사다난했는데, 지난해 국회를 이끌어 오신 입장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소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A. 정기국회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이 판단해야 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한 해를 돌아해보면 제가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역대 최소 득표 차이로 출범한 정부였고, 또 여소야대라는, 여와 야가 최근 십수 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립과 갈등이 빚어졌고 그래서 대

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회외교 등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2014년 선진화법 이후에 예산안이 가장 늦게 처리됐다는 점,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연말 민생과 관련된 일몰법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고 넘겼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무엇보다도 법을 지키는 국회를 확립해야겠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법정기한인 4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취임 초부터 약속드렸고, 그리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헌 절차법을 입법해서 국민들께 공표하고, 정치권이 국민들께 하나의 약속을 드리고 추진해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정치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Q. 지난해 예산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 시한을 어기는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 개인적으로는 예산안 처리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행태를 막기 위한 어떤 구조적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또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A.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야당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당은 본회의는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군사기밀이 노출될 우려도 있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방위를 공청회 형식으로 소집하는 방법, 또는 국방위와 운영위원회를 연석회의로 운영하는 방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극장가에서는 ‘헤어질 결심’이 큰 호응을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여야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합의할 결심’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2주일이나 예산안 처리를 늦춘, 경찰국이라든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안 639조 원 중 5억 원 뿐입니다. 이 5억 중에 얼마를 삭감해야 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인 입장 차이,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다보니 2주일이나 민생과 관련된 639조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저는 여야 모두가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민생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예산제도가 헌법에는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줬는데,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제출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정 관행이 9월에 결산을 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전체 예산안에 약 9천 개 정도의 세부사업을 심의해서 12월 2일까지 의결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법정기한을 못 지키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 저는 의장이 되기 전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예산정책처에서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안은 예산편성의 단계별로 3월에 재원배분장관회의부터, 각 부처가 예산안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할 때, 그리고 결산을 7월 15일까지 앞당겨서 끝내고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전년도 예산집행의 문제들, 이런 세 가지 기회에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국회의 의사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보니까 정부 일각에서는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는 이 문제는 전문가들 간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만일 그것이 문제라면 올해 개헌을 할 때 국회의 예산심의회확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헌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3, 4월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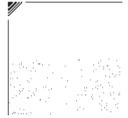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현장 모습

에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개별 의원들 소신과는 별개로 여야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아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구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대안들 중에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합한 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법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특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 현행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시켜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어떻게 고치든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간, 정치세력 간 협의가

가능한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셨습니다. 그동안 보면 선거법 논의가 굉장히 한 정당 안에서만 지역에 따라서 주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계속 뒤로 미뤄왔다가 선거 실시하기 한 달 전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합의를 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위성정당도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1년 전에 이것을 정해놓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한을 갖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개특위가 조정안을 제일 늦게 만들어냈는데, 지난 연말에 정개특위 위원들과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올해는 정개특위가 늦어



도 2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 안이 단수 안이 아니어도 좋다, 단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복수의 안을 두 개 정도 만든다면 그것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은 서명할 수 있는 그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면, 3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도 4월까지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도 의장님께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손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또 직선제를 내각제 등 다른 안보다 선호하는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권력구조 개편방안, 국민 여론을 설득할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

A. 저 이전에 국회의장을 지내신 네 분 모두 지난 8년간 취임하실 때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추진하셨는데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될 때 동시에 개혁절차법도 입법을 해서 정치권 간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국민에 대한 투명한 약속으로 제시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 가줘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작년 제한절 때도 그렇고, 몇 차례 개혁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내각책임제로 가려는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번에 개혁할 때는 국민 통합적 개혁이어야 하고 따라서 개혁절차법을 만들게 되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창설과 함께 공론화를 맡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헌법개정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속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큰 방향을, 국민의 의사를 헌법개정특위에 계속 제공해 가면서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의 여론은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이 낮습니다. 대통령제로 하되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의 임면권을 국회에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약에 대한 심의권, 이런 것들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좀 실질화해야 된다, 대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속의 민주주의적인 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면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도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의 헌법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Q.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선거법 개정이 안 되면 사실 개혁까지 동력을 가져가기도 어려운데,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선거법 개정과 개혁 모두 성사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특별하게 생각해두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전원위원회의 경우 여야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설득할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지난 1월 9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야에서 각각 6명씩 각 분야의

전문가와 오랜 경륜이 있는 분들을 추천했고, 또 제가 12명을 추천해서 모두 24명으로 이루어졌고, 4개의 파트로 나누어 헌법개정의 분야별, 그리고 선거법 등 정치개혁 분과로 나누어 개헌 논의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처음 시작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당장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확정지어야 하니까 지금의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복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고요. 그러나 1월 9일 발족한 개헌자문위원회는 전반적인 개헌 논의를,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수렴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법이 확정될 때 저는 개헌절차법을 함께 입법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다루어온, 국민의 67%가 찬성하고, 전문가의 89%, 국회의원의 93%가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뤄내려면 절차적 과정이 필요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정당의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 또는 어떤 부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왜곡되는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Q. 의장님께서 지난해 예산안 처리나 이태원 국정조사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새해 들어서도 각종 현안에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야당은 긴급현안 질문을 요청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여야 간 협치를 견인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대립과 갈등을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고 정리를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에 여야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또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데 같이 토론하고 다뤄 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와 야, 또 정부와 국회가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전제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중재의 노력,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서 정부나 대통령과도 대화의 기회가 많아지게 하고, 또 여야 간에도 다양한 장을 거쳐서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뿐만 아니라 특위 또는 의회외교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만나 흥금을 털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드는 일이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의원회관에서 미술품 철거 사건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광재 사무총장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의장님은 사전에 보고받으신 바가 없으셨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사무총장이 현재 국회에서 정해놓은 내규에 따라서 철거 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철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최하는 전시회나 행사들이 과거에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고 하는 시설물이 특정 개인이나 정치 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라서 이 문제를 계기로 여야 간 협의를 해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시될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2030 부산엑스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그동안 엑스포 유치에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성과는 어떤 정도인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하실지 궁금합니다. 또 의장님이 보실 때 현 시점에서 엑스포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A. 올해 의회외교의 목표는 구체적으로는 방산 수출, 에너지 협력, 그리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그 중에서도 2030 부산엑스포는 올 11월에 최종 결정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달 30일 김영주, 정우택 두 부의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의원들이 해외에 출장 갈 때는 반드시 의회외교,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산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삼자일체로 서로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채널도 이미 구축해 놓았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제가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각 나라의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원 발언을 얻어냈고, 또 IPU총회에 가서는 10여 개 나라의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다각적인 활동을 해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최종적인 투표로 우리가 득표를 얻으려면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도국가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데, 최소한 투자사절단이나 경제사절단이 그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외교를 통해서 얻어진 지원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2월에 국회 측의 요청으로 루마니아,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을 함께 다니는 경제사절단, 투자사절단이 구성되어 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Q.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검사가 확장되고 있고 그 맞불 격으로 중국 정부 측에서는 한국인 단기비자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중국 외교 관련, 해법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여야 관계는 계속 악화하는 것 같습니다. 3·8전당대회에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가 선출될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급작스럽게 워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꾸면서 코로나19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으로부터의 여행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와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문

제는 양국이 외교당국 간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나서 협의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회도 저도 리잔수 위원장 등 중국의 정치인들과 함께 이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19일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 만찬회동 때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서는 강한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제나 개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나 화합의 분위기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국회는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양곡관리법 등을 직회부 방식으로 강행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법에 따른 절차라는 점에서 의장님께서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서 여야 간 협치 분위기를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협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최종결정하는 국회의 일정이 가능하면 여야 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서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의정 관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저도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



야 중진 10여 분이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에 관한 큰 모임을 만들자고, 가능하면 300명 의원이 전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이미 정당을 가리지 않고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50, 60여 명이 그런 형태의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요구는 국회의원 사이에 굉장히 폭넓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좀 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Q. 이번 국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때문에 민생법안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앞으로도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생현안이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협치를 중재하시는 의장님 입장에서 이런 비판에 대한 생각과 여야 간 조율 방법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올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처를 잘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중 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급망 변경에 따라서 중국에서 탈출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대만과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지난해 3·4분기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실적이 신고 기준으로 무려 30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에 투자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행 세법이나 노동관계법, 또는 금융지원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의사를 모아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적극 나서서 권유하고 같이 대화하고 조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Q.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0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당 측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일단 의장으로서 현행 헌법과 또 관련법에서 보장된 불체포특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국가가 의원의 여러 가지 특권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 같은 것은 동결해서 전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한 사람이 받는 인건비는 오히려 줄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불체포특권 같은 것도 더 좁혀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엮어서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춰서 다루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리 고영선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 위촉식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1월 9일 위촉식을 마친 뒤 국회 사랑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

김진표 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

대표(전 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전 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정대외부총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철 국민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 김 의장과 더불어 민주당·국민의힘 등 양 교섭단체가 추천한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인사 21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제1분과·제2분과·제3분과·정치제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헌법 개정 관련 논의는 제1~3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제1분과위원회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위원회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위원회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개헌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개헌특위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김진표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우선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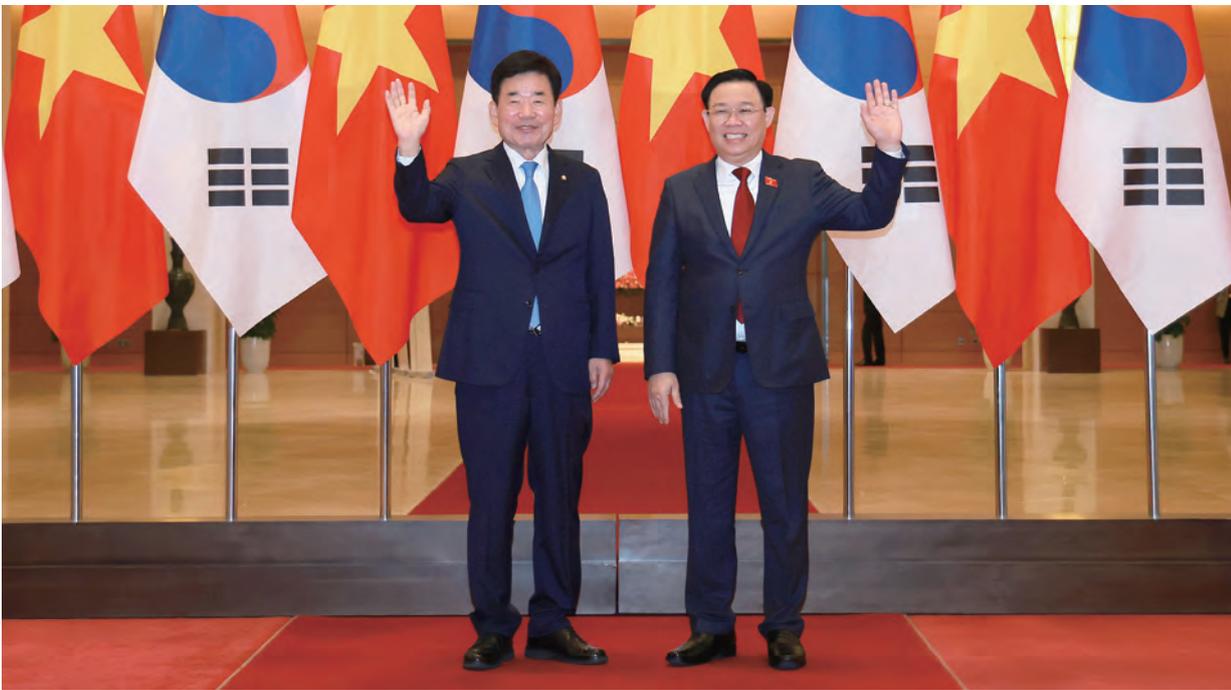
김 의장은 이어 “오늘은 국회의장인 저와 자문위원 여러분이 개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국민도 만족하고 정치권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헌 기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개헌 공감대 확산과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보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시로 공유받으면서 함께 공부하겠다”며 자문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양국 간 경제협력·인적교류·방산 협력 등 전방위 외교전 펼쳐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1월 17일 베트남 하노이 국회의사당에서 브영 딩 후에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과 인도네시아 대통령·하원의장·국민평의회의장 등 양국 정부 및 의회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기존 협력의 핵심축인 교역·투자 확대 지원과 외교·안보 등 전략분야 협력 확대 등을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전방위 의회외

교를 펼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13일 호치민시 통일궁에서 판 반 마이 인민위원장과와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자 제13차(2021-26) 중앙당 집행위원인 마이 위원장과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확장 및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호치민시 차원의 지지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응우옌 티 투 하 닙빙성 당서기(김 의장 오른쪽)가 1월 15일 베트남 닙빙성 당사에서 양측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상범·김희재·전재수·박광은·이종성 의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김 의장).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약 절반 정도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했다”며 “호치민시가 한-베 관계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향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의 심화를 위해서도 한국과 호치민시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후 삼성전자 호치민 생활가전복합법인 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복합위기로 힘든 여건이지만 좋은 제품을 개발해 세계적 가전업체의 위상을 계속 확보해나가길 바란다”며 현장 관계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해결해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15일 하노이 인근 닙빙성 당사에서 응우옌 티 투 하 닙빙성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이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닙빙성은 현대자동차와 한국 자

동차 부품사가 다수 진출해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곳이다.

베트남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연쇄 회동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17일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과 연달아 회담을 갖고 숨가쁜 의회 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은 오전 하노이 국회의사당에서 브영 덩 후에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공산당 중앙당사에서 응우옌 푸 쯡 당서기장을, 이어 총리실에서 팜 밍 쯡 총리를 면담하는 등 국가서열 1·3·4위 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을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베트남 국가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베트남은 의장 취임 이후 처음 방문하는 아시아 국가로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새로운 30년을 여는 원년 첫 달에 방문이 이루어져 더욱 뜻깊다”며 베트남 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수교 30년간 양국이 달성한 성과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한-베 교역액이 한-일 교역액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1월 17일 공산당 중앙당사에서 베트남 응우옌 푸 쩡 당서기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을 넘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이자 최대 개발협력국이며,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 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고, 한-베 다문화 가정도 8만 명이 넘는 등 문자 그대로 양국은 친척·사돈의 나라”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응우옌 푸 쩡 당서기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외교 관계가 최고 단계로 격상된 만큼 그에 걸맞게 양국 국민간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심화시키며, 아세안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협력을 넘어 해양안보·방산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이어진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희토류 개발 등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강대국간 경쟁 심화, 공급망 교란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며 “재작년 한국의 요소수 수급난 극복 과정에서 베트남의 신속한 협력에 감사하며, 희토류 개발 등 현재 양국간 논의되고 있는 협력 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팜 밉 쩡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베 협력의 핵심 축이었던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국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건설 분야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쩡 총리는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금융기관의 활동을 환영하며, 한국은 대(對)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만큼 특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1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할림 군사공항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인 및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비자 및 노동허가서의 신속한 발급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양국간 경제협력 진전으로 베트남 방문 외국인 중 한국인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자발급·노동허가서 등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에서 열린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준공식에 참석했다.

수교 50주년 맞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18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수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공급망·방산·북핵 등 외교·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조코위 대통령의 지방 출장 일정을 조정해 자카르타 할림 군사공항에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 방한(2022.7)한 외국 정상이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아세안의 실질적 리더국가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아 미래 50년을 함께 일구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중요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1월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을 만나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한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협력이 내실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전년(2021년) 대비 37% 급증하는 등의 성과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19일 수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뒤이어 밤방 수사티요 국민평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인니 최고위급 국가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푸안 하원의장과 회담에서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7월)과 푸안 하원의장(11월)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수교 50주년 기념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양국간 우호친선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진 밤방 의장과의 면담에서 “한-인니

는 아세안·G20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행하는 인니가 아세안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역내 및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밤방 의장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우호관계가 공고해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의회도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또 두 의장에게 인도네시아가 본격 추진하는 수도 이전 등 인도네시아 각 도시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20일 자카르타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델타마스 자동차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격려 방문을 끝으로 8박 10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운·전재수·김희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중성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2023년 국회 10대 과제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월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월 16일 국회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일류국회’로 도약하기 위해 국회의 원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국회사무처는 의장님을 보좌하

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입법, 정책, 소통, 혁신의 네 가지 주제로 ‘2023년 국회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개헌 및 정치제도 혁신 지원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국회 입법역량 강화 △국회 어젠더 선도 △정책외교 강화 △국회 홍보 효과 극대화 △뉴미디어 기반 의정활동 지원 △대국민소통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 국회 기반 구축 △교육·연수 및 근무환경 혁신의 과제를 담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의원들의 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왼쪽 가운데)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년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분별한 입법을 규제하는 ‘입법규제 영향 평가 도입’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입법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 정책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하겠다. 특위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조한 ‘의회외교’도 언급하며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다”며 “그간의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는데 올해부터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개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많이 당선되거나 너무 많은 사표가 생기는 선거 시스템은 바뀌야 한다. 다당제의 기초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복수의 안을 만들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원 전원의 의견을 물어 새로운 선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1976년 첫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채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국회의정연수원의 기능도 대폭 강화해 국가 주요기관과 함께 국회의원 연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복합위기라는 2023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생각의 힘’이다.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며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가겠다. 일류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특집

경제복합위기의 현황과 대응방안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환경으로 1.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기 지표는 부진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국내 수출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경제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제안보' 정책 수립해야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제도 혁신으로 국가경쟁력 높이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도성장 달성 방안 마련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가계채무와 주거비용 경감시키려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돼야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고부채와 대외건전성 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와 조화로운 정책운용이 중요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제안보’ 정책 수립해야

2022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로 인한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OECD에 의하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2%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의 3.1%보다 거의 1%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기조 속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공급망 교란 및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제는 글로벌 차원의 경제 ‘복합위기(perfect storm)’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불안정 속 공급망 붕괴 및 국제경제질서의 블록화

각국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 등 통화 긴축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며 실물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2024년까지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국가들에도 통화 긴축정책의 동조성을 확산시키며 세계 경제성장세를 더욱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동안 미국의 ‘강달러’로 인해 각국의 통화가치를 비롯해 우리의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져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한 무역적자 등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은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를 비



이효영 교수
국립의교원



로해 외국인 투자금 유출, 물가인상 압력을 더욱 상승 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응한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은 국내 경기 위축의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통상환경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의 기조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및 분절화, 탈세계화 및 국제경제질서의 블록화 등의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채택되기 시작한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망 재편 및 산업보조금 정책 등 더욱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동맹국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주의적인 통상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보건안보 및 식량안보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한 수출통제 조치는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제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을 전반적으로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 교란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각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주요 산업의 필수재로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 부족 문제도 초래하여 대내외적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의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간 국제공조를 불가능하게 하며 전반적인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대외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대비 필요

현재의 경제복합위기는 이와 같이 진원지가 복합적이며 그 파장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특정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급망 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부족과 국제가격 인상 및 인플레이션 문제는 대외적 요인들로서 우리가 국내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후적 대응과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외통상 정책의 차원에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제안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다른 중견국가들과의 연대로 강대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경제 규범과 질서의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강대국 주도의 경제안보 논리에 경도되지 않도록 더욱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국제통상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

제도 혁신으로 국가경쟁력 높이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도성장 달성 방안 마련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의한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국가들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복합적 공급측 비용 인상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상황은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유가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현상이나 그 영향은 당시보다 적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경기부양이 되더라도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져서 오히려 실질소득이나 실질임금이 하락해 다시 임금 상승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감축과 이자율 인상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물가상승의 억제가 가장 시급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긴축 및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도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이 1%대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물가상승률은 4%대로 전망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2%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므로 경기침체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수출 부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의 무역 적자 규모는 475억 달러로, 최근 경험하지 못한 적자 규모를 보였다. 특히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를



강성진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가장 호황을 누렸고 그나마 경제성장을 지탱해 주었던 반도체 시장의 수출 규모 역시 하락하고 있다.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가 81만 6천 명이 증가하여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1년에 낮은 취업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와 코로나19의 방역 완화에 의한 소비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저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고용한파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중심 정부의 대응 정책으로 경제 비효율성 제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3.50%에 이르고 있다. 사상 최초로 일곱 차례 연속으로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아직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25~4.50%로 격차가 있고 5%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시행해야 할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자율 하락이나 유동성 공급(추경과 같은 정책 수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제도개혁을 통한 공급측 비용인하 정책이 시급하다. 공공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생산 원가의 하락에 의한 공급 확대를 주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다. 교통부에서 ‘우버’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당장 물류 부문으로 이동하는 택시 운전사를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현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수단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 이는 숙박 부문에서의 ‘에어비엔비’의 전면적 허용도 포함된다. 정책 방향을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정책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떨어져 있는 부문의 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141개국 중에서 13위이지만 생산물시장 부문은 59위이고 노동시장 부문은 51위였다. 노동시장은 거의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이들 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당장 물가상승이 멈춘다면 이자율이 인하되고 경기부양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그 이전에는 힘들더라도 제도개혁이라는 차원의 공급측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 분담을 전 국민이 동등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높은 이자율에 의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심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자율 부담 경감이나 원금상환유예 등 사회복지 차원의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추가적인 유동성이 아닌 기존 정부지출 규모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제로’의 세계적 시행에 부합한 대응 정책을 현재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감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 세대만 아니라 후세대에 계도 더 나은 경제성과를 거두고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가계채무와 주거비용 경감시키려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돼야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됐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고 동시에 가계부채 잔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2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1천9조 원이다. 이는 가계부채 총량(1천870.6조 원)에서 판매신용(113.8조 원)을 제외한 가계대출(1천756.8조 원)의 약 57.4%를 차지한다.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은 주택자금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가계부채 총량도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부채 총량도 감소하므로,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 부채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 중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반절 이상이 부동산 관련 부채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인 KB아파트담보대출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4.5, 경기의 경우 10.3, 인천의 경우 9.1로 나타난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평균적인 연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14년 6개월을 모아야 평균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 런던, 샌프란시스코보다도 높은 수치다.



김미루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매우 반길 만한 일이다.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된 대다수의 정책들보다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 시장의 거시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거시적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정책 개입만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12)에 따르면 주택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2021년 4/4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면서 소득 측면에서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 당국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시행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통해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를 특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최근 수준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거시적 규제 완화보다는 주거 안정 차원의 미시적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주거 안정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시장은 주택임대차시장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거치며 주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부채가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순자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최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결정했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결국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과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취약 계층 보호로 최소화되는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부동산 매물들이 적절한 가격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채무를 지는 임대인과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임차인 사이에 정보비대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세계약 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시행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는데 은행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자가 변경되어 상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가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계약 도중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고부채와 대외건전성 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와 조화로운 정책운용이 중요

2023년은 우리 경제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다양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의 지속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이미 세계 및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동안 부풀어진 고부채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재정·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의 국가부도 및 외환위기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탈세계화와 보호주의의 심화다. 미·중 간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되고 전세계가 과거 냉전 때처럼 블록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고 세계화의 이점을 누려 온 우리 경제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복합적인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책 당국의 통합적이고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고부채와 대외건전성 관리 등 리스크 관리의 강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말 정부부채는 GDP 대비 45.9%로 과다부채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는 각각 106.6%, 114.5%로 모두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BIS 자료 기준). 우리나라는 민간부채의 위험성이 정부부채에 비해 높아 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처리 메커니즘 강화, 비용 효율적인 가계부채조정 프로그램(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 개인에게 지원을 집중), 도덕적 해이 최소화 등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건전성 조치를



정영식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건전성 조치를 미세 조정할 수 있겠으나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 강화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리스크 관리의 두 번째로 대외건전성 관리의 강화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천400원대 중반까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을 경험했다. 2023년은 지난해와 같이 매우 불안할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다각적인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게 기존 외환정책 수단(외환건전성 조치, 외환보유액, 금융안전망)을 활용하거나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안전망 중 효과가 입증된 양자 통화스왑을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합의 이후 양국 간 정례협의, 외환시장 안정 수단 등 가시적인 후속 성과를 도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를 상회하고 자본흐름 측면에서 비은행 부문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자산 및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통화·금융정책 간 조화 중요

두 번째로 조화로운 정책 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경기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간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영국 재정정책발 금융불안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영란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가 불거졌다. 여기에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되 금융안정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하는 대응이다. 우리나라는 K-문화, 디지털 기술,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흑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흑자는 최근에 개선된 두드러진 구조 변화이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외화부족국에서 외화잉여국으로 변모했다.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사상 처음으로 2014년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2018년에는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도 흑자로 반전됐고 그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외금융자산 중 연기금, 증권, 보험 등 민간 자금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외환 당국은 이들 민간과 연계된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한시적인 환해지 목표 비율 확대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생산적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운영할 것”

주호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Q. 국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소개와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국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국회운영, 국회법 및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이며, 겸임 상임위원회로서 소속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기 제안,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 국정감사 계획서 협의, 국회 소속기관장 임면동의,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위 위원은 총 28인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간사는 교섭단체의 원내 수석부대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노동·연금·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는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새해 운영위의 주요 현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운영위는 국회의 조직·예산·의사(議事) 등 국회 운



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는 항상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국회의 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해에도 이러한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같은 장기적 관점의 국회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보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입법·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국회의원 입법의 규제 심사 제도를 확립하는 것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올해 1월 5일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상반기에는 해당 규칙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1년 9월에 세종의사당 설립 근거가 국회법에 명시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취지에 맞추어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제20대국회에 접수된 청원의 80%가 장기간 미처리 상태로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는 등 청원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제21대국회에서 운영위가 거둔 주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운영위는 제21대국회에서 다양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우선, 상시국회와 원격영상 본회의를 명문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제21대국회 첫 번째 정기회 기간인 2020년 12월에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2·4·6·8월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회 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하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국회법에 규정하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했습니다.

한편,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군내 인권침해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운영위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생산적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선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상황을 명심해 협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구미

산업 중심지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형 성장 도시로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진눈깨비가 비로 바뀌며 고요하게 대지를 적시던 겨울 한가운데 어느 날 의정보고대회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영식 의원을 만나기 위해 경북 구미로 향했다. 금오공대 교수와 창업진흥원 이사장, 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한 후 제21대국회에 입성한 김영식 의원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보람도 크다”며 활짝 웃었다.

가족 단위 여행객에 인기 만점인 구미에코랜드

김영식 의원은 “구미를 흔히 공단지역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도립공원인 금오산과 천생산, 태조산 등이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낙동강이 도심 중앙을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대의 내륙 산업단지를 보유한 구미는 구도심 지역인 ‘갑’지역과 신도심과 농촌이 어우러진 ‘을’지역으로 나뉜다”며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공항과 인접한 구미시를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식 의원과 처음 찾은 곳은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에 위치한 구미에코랜드였다.

“산림휴양공간인 구미에코랜드는 산림, 문화, 전시, 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산림문화관, 생태탐방 모노레일, 산동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어린이테마교과숲, 문수산림욕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에코랜드 내를 운행하는 1.8km에 이르는 생태탐방 모노레일이 가장 유명한데 모노

레일을 타고 정상에 오르면 시원하게 펼쳐진 구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재 육성의 요람 금오공대

김영식 의원이 다음으로 안내한 곳은 그가 20여 년간 몸담았던 금오공대였다.

“국립 금오공대는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공학계열 중심 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구미 국가공단의 R&D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며, 구미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1994년부터 금오공대 교수를 역임하고 2013년 제6대 금오공대 총장에 취임했다. 또 2004년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장을 시작으로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창업진흥원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전역에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여의도에 오기 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창업기업을 육성하면서 ‘왜 우리 교육환경과 창업환경은 세계 일류가 될 수 없는가?’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교육 현장·창업 현장이 필



구미에코랜드에서

오로 하는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결국 저를 정치로 이끈 것 같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상위 인재들의 지나친 의치학계열 선호는 장래 국가 경쟁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과 정책들을 입안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인재들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리사와 신라불교초전지마을

금오공대를 둘러본 김영식 의원은 다음으로 신라 최초의 사찰인 도리사를 찾았다.

“도리사는 중국에서 불도를 닦고 귀국한 고구려의 아

도화상이 신라에 와서 불교를 일으키고 돌아가던 중 한창 겨울인데도 복숭아꽃·배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고 이름 지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석탑, 극락전 등 볼거리가 많고, 석가모니 진신사리탑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리사의 전망대인 서대에 서면 구미시 일대와 낙동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대 난간에는 “구포에서 바라본 낙동강은 장려하고 도리사에서 바라본 낙동강은 수려하다”는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 구절이 이곳의 풍경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신라불교초전지마을은 아도화상에 의해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구미시 도개면 모례마을에 불교초전의 역사를 재현해 놓은 곳이다.

“아도화상이 신라의 불교 포교를 위해 구미 선산 지역을 찾았을 때 모례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불교를 알렸습니다. 이런 사연을 바탕으로 신라에서 구미 지역에 가장 먼저 불교가 전파된 것을 기념해 만



금오공대 전경



구미보에서

들어진 곳이 바로 신라불교초전지마을입니다.”

신라불교초전지는 신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해지고 꽃 피우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과 사찰음식체험관, 전시가옥, 한옥 숙박시설인 전통한옥체험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 자생력 강화와 인재육성, 창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김영식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된 구미보에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미보는 장수와 복의 상징인 거북이, 수호의 상징인 용을 형상화한 시설로 거북이 형상의 중앙 권양대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낙동강을 360도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구미보 주변은 수변공원 및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이 조성돼 지역민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인기가 높다.

김영식 의원은 “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2000년대 들어 대기업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시의 근본적인 자생력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까지 맞게 됐다”며 “자생력 확보를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구미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구미의 강점인 전자산업 공단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구 유치,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도로, 철도망 등 인프라 개선, 교육 인프라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인재 육성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북 구미: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김민석 의원실 한구석에 걸려 있는 액자에 적힌 글귀다.
김 의원은 제21대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을 이끌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
(APPPGH)의 의장으로도 선출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그는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 때인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전국대
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학련’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당
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3년간 복역하게 된다. 수감 중
작은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김수환 추기경의 노력
으로 장례식에 잠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갑자기 교도소장이 오더니 사복을 입혀서 버스를 타
고 청주교도소를 빠져나왔어요. 저는 휴가인 줄만 알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밤에 도착한 곳이 작은
형의 장례식장이었던 거죠.”



김 의원은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선배들을 돕다가 ‘정치권에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권유로 약관 27세의 나이에 1992년 제14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지만 거물급 정치인을 상대로 선전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이후 1996년 제15대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를 선거구에 출마, 31세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다.

1997년 한보그룹 청문회 때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가 됐고 제15대 대선 때는 단독으로 당시 김대중 후보의 TV 지원연설을 할 만큼 인지도도 높았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386세대의 대표 주자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02년 당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후 18년의 야인생활을 거쳤다.

“정치권에서 저만큼 몰리코스터를 탄 사람도 드물 겁니다. 젊은 나이에 창당이나 공천 작업을 주도할 만큼 굉장히 잘 나가도 보고, 또 엄청난 비판을 받으며 추락하기도 했죠.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지요.”

3선이지만 초선의 마음으로

김 의원은 현역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3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선거 운동을 할 때 어느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가 적힌 부채를 선물해 주셨어요. 다산 선생이 18년 유배지에 있었다면서 저더러 새롭게 시작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국회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김 의원은 “선수로는 3선이지만 사실상 초선이나 마찬가지여서 남모르는 고충이 있다”고 했다.

“제가 초·재선 때 6년 내내 이른바 언론에서 평가하는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됐어요. 인턴제도가 없을 때 자비를 털어 인턴을 썼고 국감보고서라는 게 없을 때 국감보고서를 냈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든 것이 일상화됐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모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만큼 국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김 의원은 “국회에 다시 왔을 때 ‘나는 초선’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전문성 넘치는 30대, 40대 의원들과 의정활동으로 승부를 벌이겠다는 건 과욕이라 생각했다. 그저 초선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과는 달리,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공공의료 확충, 국민보건체제 정립, 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등 현안에 대한 여야 협치를 이끌었다. 질병 예방과 감염체계구축에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APPFHG)의 의장으로도 선출돼 보건복지 분야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2년 연속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도 이어갔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5법’을 발의했고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발의했다.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느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해요. 다시 정치를 하게 되면, 예전과 뭐가 달라져야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30대에는 화려한 정치, 빨리 달리는 정치를 지향했다면 50대가 된 지금은 바르게 하는 정치, 가치 있는 정치를 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을)



2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강대식 의원이다. 그를 추천한 김민기 의원은 “제21대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으로 우리 장병의 처우 개선과 보호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군사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대한민국이 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는데 힘을 모아주셨다”고 추천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김 의원님과과는 전반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후반기 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함께 활동 중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존경받는 동료 의원에게 칭찬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고향인 대구 동구에서 12년 동안 구의원과 구의회 의장, 그리고 구청장을 역임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에서 출사표를 던져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강 의원은 “태어나서 군대생활 빼고는 한 번도 고향을 벗어나본 적이 없다”고 웃었다.

“평생을 고향에서 살아온 대구 ‘토박이’여서 그런지 어느 정치인보다 지역구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지역 의정을 이끌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었죠. 수십 년을 대구 동구 주민으로서 살면서



지역민들의 애환, 지역 발전에 대한 갈증 등 그들의 간절 한 목소리가 저를 정치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지역구가 도농 복합지역으로 대구에 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특히 공군비행장(K-2)이 한 가운데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등 발전 속도가 매우 느려 항상 마음 속 깊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그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지역구에는 대구국제공항과 함께 공군비행장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간 지역 주민들께서는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피해, 재산권 제한, 학습권 침해 등을 인내하며 살아오셨고, 공군비행장 이전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청하셨지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 법에 따라 공군비행장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 그 갈등을 해결·조정하는데 일조했고, 마침내 2020년 8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보지가 경북 의성·군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북의 염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이끌어 낼 것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지난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2022년 연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통합신공항은 510만 시도민의 염원인 점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국가경쟁력 확보,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약속한 사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지난해 11~12월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고, 야당과도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만큼 짧은 시간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는 또 요즘 항공,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는 만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처음엔 지역을 살폈던 경험이 중앙정치에서도 통할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와보니 민생의 어려움을 달래고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똑같더군요. 정치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삼석 의원을 칭찬합니다.

“서삼석 의원님(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저와 같이 지방의원으로 입문해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내시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지역 전문가입니다. 영·호남을 뛰어넘어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는 의원 중 한 분이시며, 솔직담백하시고 의정활동도 매우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서삼석 의원님이야말로 칭찬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

경기도의회 재선 의원을 거쳐 제21대국회에 입성한 고영인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1933년 제32대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했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말이다. 고영인 의원을 만나 그의 인생 좌우명과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08년 보궐선거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고영인 의원은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 후 2012년 제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도의원을 사퇴한 그는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역민의 신망도 얻고 조직력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옮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그간 살면서 지켜온 원칙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위안을 받곤 한다는 고영인 의원은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문을 접하게 됐다.

“나이 50에 이렇게 정치인생이 막을 내리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몹시 힘들던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구절을 접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대신 그간 살면서 지켜온 철학과 사고에 입각해 무엇이 정도(正道)인지 고민해 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 그렇



계 스스로를 달래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두 번째 고배를 마신 그는 삼수 끝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지역 원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8년을 준비한 끝에 얻은 값진 결과였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 실시’에 큰 역할

고영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초·중 무상급식을 처음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 131명 중 민주당은 12명에 불과했는데, 제가 대변인을 맡아 활동하면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1년 넘게 농성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후 대표의원을 맡아 무상급식 정책 도입을 주도했고 그 후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당시 무상급식 관련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에 눈을 뜨게 됐다.

“가난한 아이에게만 공짜밥을 주면 되지 부잣집 아이에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념이자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아이만 공짜밥을 먹게 되면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조심하게 되고, 알려지면 매우 창피한 일이 됩니다. 무상급식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행정비용도 들고요. 아동의 가난은 부모에 의해 조성되는 환경이고, 아동 스스로의 노동으로 가난을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이 자라는데 필요한 환경은 국가 또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의 기본 철학입니다.”

당시 고영인 의원은 무상급식 관련 방송에 출연하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논쟁에 밀리면 더 공부하고 연구했

다. 덕분에 북유럽 복지국가에 관심을 갖게 돼 8년간 연구를 이어갔고 ‘경제성장의 엔진 복지국가’라는 책도 냈다. 그는 “무상급식 관련 활동은 개인적으로는 생활정치의 시작이자 복지국가에 대한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였고, 국가 전체로는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출발점이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모델로 한국형 복지국가 만들고파”

고영인 의원은 국회에 입성 후 총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100%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자산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발의한 법률안”이라며 “아직 계류 중이지만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법으로,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고영인 의원의 가장 큰 꿈은 북유럽 복지국가를 모델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와 연결되는 것이 정치체제입니다. 양당 구조의 정치에서는 정책경쟁이 힘들고 그렇게 되면 복지국가로 가기 어렵습니다. 소수정당이라도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수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돼야 정책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관심만큼 정치체제에도 관심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위해 머리 맞댄 여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개최

여야 국회의원 40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 남인순·박광온·양금희 의원)은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에 걸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연속정책토론회는 1월 17일 마지막 5차 토론회로 끝을 맺었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저출생·인구절벽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을 모색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목적이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남인순·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정회원으로는 강선우, 권인숙, 김상희, 맹성규, 설훈, 윤재갑, 이학영, 인재근, 홍성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강득구, 김성환, 김영배, 민홍철, 소병철, 송옥주, 안규백, 양경숙, 위성곤, 이용빈, 전용기, 정춘숙, 정태호, 한준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승수, 서일준, 윤재옥, 이명수, 이용호, 전봉민, 조명희, 추경호,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상 국민의힘), 배진교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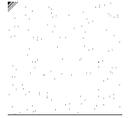
(정의당),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참여해 총 40인으로 구성돼 있다.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1월 17일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토론회는 초저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각 부처별 저출생 예산의 통합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인순 의원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눠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의 인구변동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 설치와 전담부처인 ‘인구가족부’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장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독자적 집행·예산권이 없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라며 “이 위원회를 인사·예산 등 독립 권한을 가진 대통령 소속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로 승격 개편하고 인구 전담부처로 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왼쪽에서 여섯 번째), 최연숙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칭 ‘인구가족부’ 또는 더 포괄적인 ‘인구가족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대응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례와 같이 저출생 예산은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특별회계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상징적 의미는 줄 수 있으나 저출생 정책으로 포괄되는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라 특별회계로 포괄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승격과 전담부처 신설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

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통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더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재정 제도와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1차 토론회(지난해 12월 6일)는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일까? 회복 국가와 비교’, 2차 토론회(지난해 12월 7일)는 ‘생애주기별 돌봄시스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열렸다. 이어 3차 토론회(지난해 12월 8일)는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4차 토론회(1월 10일)는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열렸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신도 주목할만큼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초저출생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글 박민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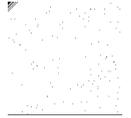
과거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서 경범죄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살인, 중상해 등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데 불과한 경범죄 처벌로서는 범죄 예방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자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스토킹행위 발생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와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스토킹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범죄 예방 조치와 피해자 지원을 할 필요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마련되어 있고,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때 사실상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폭력 유형마다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특히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원체계의 신속 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4건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을 통합·조정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돼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먼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포괄하고,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해,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방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응과 예방 강화를 위해 수사 기관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

토킹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셋째,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넷째, 스토킹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스토킹 피해 또는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에 대한 지속적 보완 필요

이러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온라인상의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대책요구가 증가하는 등 행위 유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확장되고 있는 개념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지속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올바른 플랫폼 정책, 원전 안전 대책, 소년법 처우 개선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문진석·김승원·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1월 4일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플랫폼 서비스가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 급성장하면서 법과 규제를 벗어나는 문제와 불법, 허위, 과장된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업종별로 플랫폼 진입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안 모색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플랫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희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춘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성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사무차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업종별·지역별 피해 사례와 플랫폼 기업의 정보 독점 폐해 현황,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사업자,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5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에 따른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강행 등으로 인한 지역주

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원전안전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국내 원전안전 주요 현안을,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이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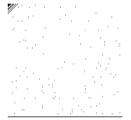
각 원전안전 지역현안은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고리원전지역 안전현안,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월성원전지역 안전현안,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영광) 위원장이 한빛원전지역 안전현안, 이규봉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울산사람들’ 대표가 한울원전지역 안전현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1월 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종료료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주 52시간제가 법제화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추가연장근로가 종료됐고 국회에서도 이를 연장하는 법 개정이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 의지를 보였지



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와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황인한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 등이 참석해 인력 운용의 한계와 물가 상승,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 등을 토론했다.

•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월 10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소년원은 전국에 10개소가 있지만 1인당 일일 급식비는 8천139원에 불과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생활을 하는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 교정 인프라와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년범의 처우 개선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주희 다지행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년범 처우 개선 및 재범방지효과를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에는 장웅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원장, 이승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여해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의 필요성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제도적 여건 보완 등을 논의했다.

• 농림위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11일 의원회관에서 '농림위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 분야 위성영상 활용 맞춤형 정보생산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업 분야에서 위성의 활용성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다양한 농림위성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농림위성 활용기술 개발사업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추진단장이 농업 부문 위성 활용 현황 및 전망, 류영렬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농림위성 산출물 품질 및 활용도 향상 방안, 김라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장이 농업관측 원격탐사 사업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규성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정 대한원격탐사학회장, 이승훈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책임연구원, 백동훈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원격탐사팀장 등 발표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

안병길·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1월 12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축산테크 발전을 위한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 확산을 위해 축산 분야 ICT 확산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온실

및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스마트 축산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축산 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축산정책을 검토하고 실제 산업에서 요구되는 축산데이터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 축산정책에 대한 발표를 맡았으며, 경노겸 한국축산데이터 대표가 축산데이터 활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송혁 건국대 교수,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경노겸 한국축산데이터 대표, 송우진 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부 연구위원, 남기환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등이 데이터에 기반을 둔 스마트 축산 전환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 도입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오영환·이수진(비례)·진선미·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13일 국내 재난과 대응 시스템을 돌아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통해 확인된 부실한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신설 및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와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가 각각 현장 전문가에 의한 재난 현장 대응 결과 조사의 필요성과 우리는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피해자의 목소리 듣기, 진상규명하기, 그리고 처벌)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박상은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과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진영민 공노총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나눴다.

· 1인 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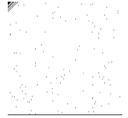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1월 16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1인 가구 연속 토론회: 1인 가구 권리 시리즈’의 두 번째인 ‘1인 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인 가구의 빠른 증가현상에 따라 1인 가구 증가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점검하면서, 사회 전반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연속 시리즈로 기획됐다.

첫 번째 시리즈는 1인 가구의 현황과 대응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제기 형태의 토론회로 지난해 12월에 개최됐다.

토론회는 박민선 재단법인 숲과나눔 박사가 미디어를 통해 본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주제로 토론회의 기획 배경과 주제를 소개했다. 주제발표는 변미리 서울연구원 센터장이 1인 가구의 건강 현황과 대책,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센터장과 조제성 부연구위원이 1인 가구 건강과 안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언론, 기업, 경찰 영역의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김명숙 KBS 프로듀서, 이준호 SK Telecom 부사장, 신하영 방배경찰서 경감이 패널로 참여해 각각 1인 가구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언론, 기업, 경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



1월에 개최된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안내(1.2~1.16)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1.3(화)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정춘숙·강훈식·김민석·남인순·강선우·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수)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문진석·김승원·서영석·배진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목)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우원식·민병덕·이동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증언한다! 건설현장에서 벌이는 민노총 불법·폭력행위 우리는 일하고 싶다. 일할 기회를 달라!	김상훈·강대식·김선교·서범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	양이원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9(월)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국공영방송의 문제점과 자유시민의 시청자주권	조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성민·송재호·박수영·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한규와 경제 읽기: 시즌3, 2강 노동시장 노동시장 동향과 고용 전망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화)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김태년·홍성국·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다당제 필요성과 가능성	안민석·김두관·박범계·장경태·전해철·홍익표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증부세 왜 폐지해야 하는가?	조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국 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윤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4차 토론회	남인순·박광온·양금희·최연숙 의원실,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	유상범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경제는 민주당!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홍성국·김태년·김경협·김성환·김승남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1(수)	농림위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위성근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디지털치료제 정책·제도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	백중현·이병훈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1.11(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박주민·이용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안철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박정하·허종식·박영순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김성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12(목)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김태년·홍성국·김경만·김성환·김승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	정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경북 구미,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유치 국회토론회	구자근·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	이수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	안병길·최춘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13(금)	제3회 국회학술세미나 - 일제에 항거한 신사참배반대운동	안병길·윤한홍·이채익·정점식·조해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이수진·오영환·진선미·장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철도·지하철 민자투자사업 재정분석연구: 정말 철도·지하철 민간투자는 효율적인가	박상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16(월)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민병덕·이재정·강득구·이용빈·이탄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인가구 연속 토론회 1인 가구 권리 시리즈: 1인 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은?	조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과 과제	설훈·김병주·김홍걸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권인숙·장혜영·남인순·진선미·정춘숙·송옥주·유정주·이탄희·윤미향·정찬민·강훈식·양정숙·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김한규와 경제 읽기: 시즌3, 3강 채권시장: 한정채부터 레고랜드까지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쇠나무

국회 소통관 앞에 고로쇠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겨울이라 잎을 다 떨궈 볼 순 없지만, 고로쇠 나뭇잎은 단풍잎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고로쇠나무는 수액으로 유명한데 절기상 경칩을 전후로 나무에 상처를 내어 채취합니다. 고로쇠 수액에는 미네랄 성분이 보통의 물에 비해서 40배가량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고로쇠라는 이름은 뼈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骨利樹)에서 유래했고 꽃말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국익 위한 의회외교 활동,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 2023년 다보스 포럼의 키워드로 선정된 단어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 위기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신조어다.

2022년은 국제적 대전환의 전조들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 가입을 결정했다. 국방비 증액에 소극적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늘렸다. 중국은 사우디의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하겠다고 하며 미국의 페트로 달러 체제에 도전장을 냈다. 북한은 전례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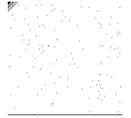
2023년 외교정책 방향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지향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부응해 우리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눈부신 산업화와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주의를 일궈낸 한국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가치 연대를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포용과 신뢰, 호혜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좌표를 재정립하고,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동북아 국가를 자처했던 소(小)지역주의적 발상을 깨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의 인태전략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의 커진 역할과 능력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정부는 인태전략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광범위한 인태지역 내 소권역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적인 추진 사업도 발굴할 것이다. 한편 인태지역 내 핵심국가와의 협력에 내실을 기하고,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역외 인태전략 국가와도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인태전략과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하에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한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다.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를 피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21세기는 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경제가 된 무한경쟁 시대다. 외교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외교에 집중하겠다. 인프라, 방산, 건설, 원전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하는 한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변화를 지원할 것이다. 해외발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는 한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한 에너지, 자원외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운영하고, 전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이다.

국회에 바라는 의회외교 방향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민주주의 발명품이라고 한다.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에게 대외 관계에 관

한 국론의 통합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한미 동맹의 강화, 한일 관계 개선, 성숙한 한중관계 정립,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안보 추진 등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외교문제에 대한 국론의 분열은 곧 우리 국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에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우리 국회도 국익과 안보에 관한 국론 통합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실 것을 희망한다.

새해에는 보다 활발한 의회외교가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1950년 3월, 신익희 국회의장은 미국 의회를 방문해 삭감된 미국의 원조를 되돌려 놓은 적이 있다. 우리 의회외교사에 빛나는 이 성과를 외교부는 잊지 않고 있다. 최근 의원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회외교를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2023년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요국 의회를 상대로 우리의 인태전략을 홍보하고,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우리 경제안보를 위해 활동해주시리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돈독한 인맥과 신뢰관계를 쌓아 국익증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대국 의회를 설득하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시는 데 대해 외교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대통령을 모시고 국민께 드리는 업무보고의 슬로건으로 ‘다시 뛰는 국익 외교’를 내세웠다. 그 국익외교에 우리 국회도 함께 뛰어주시기를 희망한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한다. 🍀

숙의(熟議)를 위한 헌법개정 방식

일본의 '내용별 개별발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승래
국회 일본 주재관

일본국헌법(이하 '일본헌법'으로 약칭) 제96조는 헌법개정 절차를 ①각 원(院)의 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헌법개정안 발의' ②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승인' ③'공포'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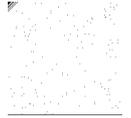
2007년 일본의회는 법률 차원에서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 이하 '개헌절차법'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일본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개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개헌절차법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괄 개정입법 형식으로 국회법도 개정해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회의 헌법개정안 제안과정을 '내용별 개별발의 원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법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별 개별발의 원칙'

일본 국회법은 의회가 국민에게 제안하는 '헌법개정안'과 구별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 발의안을 '헌법개정원안(憲法改正原案)'으로 규정하면서, 헌법개정원안을 발의할 때에는 '내용에 있어서 관련되는 사항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내용별 개별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68조의3). 내용별 개별발의 원칙 도입 시 전형적인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되었던 예는 일본헌법의 전쟁포기 조항(제9조) 개정에 관한 내용과 환경권과 같이 현행 일본헌법에 없는 새로운 기본권 창설에 관한 내용과 같이 논리적·정책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내용을 묶어서 하나의 헌법개정원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헌법개정원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취지 설명 및 그 개요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후 상세한 심사를 위해서 내용별로 발의된 헌법개정원안 별로 각



원에 설치된 헌법심사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헌법심사회의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회부되어 내용별로 발의된 헌법개정원안 별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각 원 별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원의 의결을 각각 거친 ‘헌법개정원안’이 ‘헌법개정안’이 되어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숙의(熟議) 촉진 및 헌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일본에서 헌법개정원안 발의 시 내용별 개별발의 원칙을 도입한 이유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의회 및 국민투표를 하는 국민의 숙의(熟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가공동체의 기본규범인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논리적·정책적으로 관련된 개헌 사항별로 국민투표에서 각각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한 것이다.

이는 정치권의 ‘주고받기식 합의(logrolling)’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의 각 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단일주제 발의 원칙(Single-Subject Rule)’의 영향도 받은 것이다. 미국은 각 주 차원에서 단일주제 발의 원칙을 도입하여 개정안의 범위를 개정 주제 단위로 발의하도록 하여 의회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투표에서의 숙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일본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참고된 것이다.

또한, 내용별 개별발의 원칙이 채택된 배경에는 현행 일본헌법이 세계의 표준적인 인권규정과 통치기구를 갖춘 훌륭한 헌법이며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도 바탕에 있다고 한다. 내용별 개별발의를 통하여 급격한 변화(revise)가 아닌 현행 일본헌법에 바탕을 둔 수정(amendment)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발의 단위의 기준이 되는 ‘내용별 관련성’의 판단은 의회 자율권의 영역

내용별 개별발의의 기준이 되는 ‘내용에 있어서 관련되는 사항’의 판단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일본의회의가 개개의 사례에 맞추어 판단할 의회자율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 일본에서의 대체적인 견해다.

의회가 내용별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①개별 헌법정책별로 민의를 묻겠다는 요청 및 ②상호 모순이 없는 헌법 체계를 구축하라는 요청을 각각 고려하게 될 것이며, 앞서 소개한 사례인 현행 일본헌법의 전쟁포기 조항(제9조)에 관한 개정 및 새로운 기본권 창설에 관한 개정은 서로 내용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현행 일본헌법 제정 후 일본의회의에 정식으로 발의된 헌법개정원안은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회의의 내용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발의되는 헌법개정원안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용별로 발의된 각 헌법개정원안을 구별하기 위한 제명(題名)의 작성 방법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도입 시 고려 사항

일본의 헌법개정 절차에서 도입하고 있는 ‘내용별 개별발의 원칙’은 의회 및 국민의 숙의를 유도하고 헌법의 연속성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의 개정절차에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용별 관련성 기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개헌절차법 심사 당

시, 미국의 경우 단일주제 원칙(Single-Subject Rule) 위반을 이유로 하는 제소가 종종 이루어져 절차 지연이 문 제되고 있다는 것이 심사과정에서 보고된 바 있다. 아울

러 일본의 사법부는 의회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사법소극주의 국가로 분 류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일본 헌법개정 절차상 '내용별 개별발의 원칙' 관련 규정(발췌)>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제96조 ①이 헌법의 개정은 각 원(院)의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 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에 행하는 투표에 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 으로서 즉시 공포한다.

국회법(国会法)

제6장의2 일본국헌법의 개정 발의

제68조의2 의원(議員)이 일본국헌법의 개정안(이하 “헌법개정안”이라 한다)의 원안(이하 “헌법개정원안” 이라 한다)을 발의하려면 제5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에서는 의원 100명 이상, 참의원 에서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68조의3 전조(前條)의 헌법개정원안 발의 시에는 내용에 있어서 관련된 사항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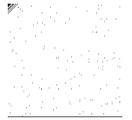
제68조의4 헌법개정원안에 대하여 의원(議院) 회의에서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려면 제57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중의원에서는 의원 100명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68조의5 ①헌법개정원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마지막 가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결로써 국회가 일본국 헌법 제96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본국헌법의 개정(이하 “헌법개정”이라 한다)을 발의하여 국민에게 제 안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양 의원(議院)의 의장은 헌법개정 발의를 한 취지 및 발의와 관련된 헌법개정 안을 관보에 공시한다.

②헌법개정원안에 대하여 전항(前項)의 마지막 가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그 원(院)의 의장이 내각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함과 아울러 이를 송부한다.

제68조의6 헌법개정 발의와 관련된 국민투표의 기일은 해당 발의 후 신속히 국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관련 면담에 응해 주시고 자료 제공에 많은 도움을 주신 다치바나 유키노부(橋幸信) 중의원 법제국장 및 가지야마 도모타다(梶山 知唯) 과장을 비롯한 중의원 법제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회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토론의 진수!

정책이슈와 의정현안에 대한
쟁점을 파고드는 뜨거운 **정책토론!**



진행
정관용 교수
(사사평론가)

정관용

매주 목요일 밤 10시 / 생방송

정책토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청문회·공청회 실시 등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청문회 실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1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비판했다. 위원들은 특히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집중됐는데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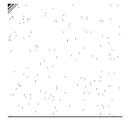
여당은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다. 조수진 위원(국민의힘)은 이 전 서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도보로 10분을 걸리는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며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과 통화한 이 전 서장이 정작 청문회에서는 오후 11시쯤 참사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한 답변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권철승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때 아비규환이었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모른다는 것은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잠자고 있었던 거나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경찰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마약 수사 등에 역량을 집중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참사 당일 50여 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위원(정의당)은 경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윤 청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윤 청장은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후 1월 6일과 12일 각각 2차, 3차 청문회를 개최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17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공청회 실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가 1월 10일 실시한 공청회에서는 이번 참사 발생 및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경원 연세대 의대 교수는 “현 체계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보건소장이 맡는데 이분은 공중보건과 방역전문가일 순 있지만 재난응급의료 전문가는 아니다. 재난응급의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판단을 따라줘야 하는데 이런 구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119 구급대원들의 현장전문응급처치가 강화돼야 한다. 장비가 없는 게 아니고 교육훈련 부족이 아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못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분투한 소방구급대원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잘못했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경제력과 사회 발전 정도에 걸맞은 그런 전문 응급처치가 됐느냐, 그건 아쉬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왔던 처음의 구조자”라면서 “이런 분들이 정책결정과정 중에, 재난안전특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배워야 할 목소리에서 정책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인파 사건 및 사고는 결론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난 유형”이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인파의 밀집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많은 인파가 도로로 나왔는데 이 도로를 활용해서 인파 밀집도를 낮춰주는 경찰의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에 재난관리 업무 전담 비서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석급의 조직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조특위는 1월 12일 2차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 등이 참석해 4시간 넘게 진술을 이어갔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도 이들의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 생존자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유흥과 밤 문화, 외국 귀신 파티 문화

가 아니라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일상이었던 이태원과 헬러윈이 왜 아직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 대처에 사과하며,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위원(국민의힘)은 “정확한 원인 규명 후 종합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교홍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사명감을 갖고 고인에 대한 위로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보고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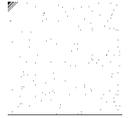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2~2036)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다. 지난 20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에너지 믹스의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국제정세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석탄 발전의 후지·보존 계획 수립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된 에너지 믹스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풍력 발전 확대 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부족에 대한 우려,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선정의 균형성,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족,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설정 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들은 또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의 책임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장기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산업계 투자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며 “원전 비중 증가에 따른 안전성, 주민수용성, 전력망 운용 환경 등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고를 마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되며, 정부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후속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외통위 위원장,
인도 외교부 차관 등 면담**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월 17일 국회에서 인도의 서러브 꾸마르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을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 방안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인도 수교가 50주년을 맞이하고 인도가 G20의 장국 수입을 맡는 올해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치·경제·IT·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김태호 위원장은 인도가 IT·우주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김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평화·인권 등을 토대로 평화와 번영을 구하는 가치 연대”라고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한-인도 간 더욱 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꾸마르 차관 역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며, 방산 협력의 예를 들며 인도-태평양 전략이 “양국 간 더 나은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태호 외통위 위원장은 1월 12일에는 리투아니아 가브리엘리 우스 란드스베르기스 외교장관을, 9일에는 싸라우 펫파놈펀 외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 확대방안 등을 비롯한 양측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NEWS

김진표 국회의장, 고(故)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조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2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 분향소를 찾아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향년 95세로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김 의장은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으로 이동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면담을 가졌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1927년 4월 16일 독일 바이에른주 마르크틀 암 인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요제프 알로이지우스 라칭거(Joseph Aloisius Ratzinger)이다. 1977년 추기경(뮌헨 대교구 교구장)이 됐고,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발탁해 바티칸에 입성했다.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종한 뒤 제265대 교황직에 올랐다. 이후 즉위 8년 만인 2013년 2월 건강 문제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재임 중이던 2006년 2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독일 뮌스터대에서 유학할 당시 교수로 김 추기경을 가르쳤다. 2007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접견 후 친서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고, 2009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교황청을 방문해 베네딕토 16세에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 고향사랑 설맞이 큰 장터 개장식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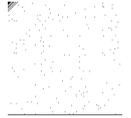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10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2023 고향사랑 설맞이 큰 장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기름값 폭등에 비료, 농자재, 인건비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다”며 “오늘 장터가 대박을 내서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장터에서는 우수 농산물과 고향사랑 답례품을 판매·전시하고 있다”며 “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사고, 내 고향 경제발전까지 돕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서는 전국 팔도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선보였다. 가래떡구이 무료시식 및 구매자 대상 설맞이 떡국세트(우리쌀 떡국떡, 한우사골곰탕, 한국농협 김치 3종) 증정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사무처-법률신문사, 콘텐츠 협력 위한 MOU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월 10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법률신문사와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일 아침 8시 국회 일정을 간결하게 제공하는 ‘오늘의 국회’ 서비스에 ‘법조계 주요 일정’을 추가해 주요 법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재판 일정, 헌재 위헌결정 등 법소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 국회방송에서 신설 예정인 입법소개 프로그램에 ‘법조계 이슈 소개 코너’ 추가 논의 등 양 기관은 입법과 사법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법률 데이터를 국회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해 정책 토론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회 입법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는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공으로 국회에 법조계의 현황이나 이슈 등이 잘 전달되어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국회에서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김명진 방송국장, 법률신문사에서는 이수형대표이사, 이재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제평화지원단 위문 방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월 12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부대 별칭인 ‘온누리’는 전 세계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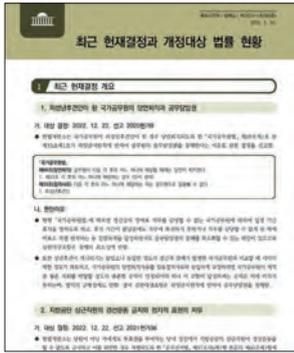
이광재 총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땀 흘리는 장병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라며 “우리 파병 부대가 현지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란 찬사를 받는다고 들었다. 평화의 정신을 알리는 대한민국 외교사절단으로서, 꼭 안전하게 임무를 다해달라”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국제평화지원단은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7월 1일에 특전사 예하로 창설된 부대다. 필요시 해외로 파병되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또는 다국적군 평화활동(PKF)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또한, 파견을 다녀오게 될 장병들이 현지에서 겪게 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을 실시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문화, 관습, 언어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NEWS

국회 법제실,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 발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22년 12월 22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결과 및 제21대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3호를 발간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①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제33조제1호, ②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본문의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255조제1항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③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해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2023. 1. 11. 기준)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20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

위원회 소관 법률 3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총 14명 선발

국회사무처는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을 통해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5명, 법제직 2명, 재경직 5명, 사서직 1명, 전산직 1명 등 총 1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주일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고,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5일,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3일~5월 26일,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5일~7월 26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에서는 1976년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전산직류가 추가됐다. 데이터·네트워크 등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선발해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사업 등 국회 주요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입법고시 전산 직류에 지원하기 위해서 응시자는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700점 이상의 토익(TOEIC)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2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성적이 필요하다.

전산직류 제1차시험과 제3차시험은 일반행정직 등 행정직군 시



험과 동일하며, 논술형 필기시험인 제2차시험은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등 3과목의 필수과목과 1과목의 선택과목(컴퓨터네트워크·프로그래밍언어론·수치해석 중 선택)이 실시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2023년을 국회인사혁신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인재채용 및 인재양성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류국가·일류국회·일류정책을 위해 헌신할 일류인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2022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선정



2022년 3월 31일 개관한 국회부산도서관이 2022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5위에 선정됐다.

부산연구원은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지역 산관학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매년 부산 시민의 생활소비 패턴을 반영한 상품·소비·지역사회 트렌드, 시책, 건물, 인프라 등을 조사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10대 히트상품을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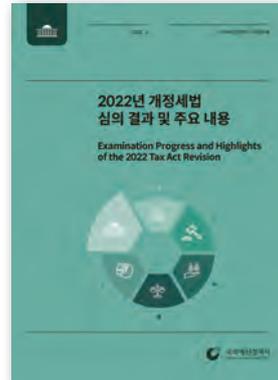
국회부산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인문·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6개 후보군에 포함됐고,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BTS콘서트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부산국제영화제 대면행사 △롯데월드 부산 개장 등에 이어 부산 히트상품 5위에

올랐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에서 건립한 최초의 지역 도서관이자 영남권 첫 국립도서관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로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다양한 지적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기관과 협력하여 송년음악회, 취업박람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문화강좌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인문·사회·문화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022년 12월 23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의 과정을 담은 ‘2022년 개정세법의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1월 9일 발간했다.

2022년 국회 세법심회는 제 400회 정기회 기간 동안 국세

관련 세법 총 19개, 심의대상 법률안 총 334건에 대해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시한에 맞춰 2022년 11월 30일 정부제출 세법안을 포함한 25개의 법률안(세법안 19개)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으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정기회 이후에도 여야는 예산안 및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국회의장이 2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제안한 후에야 여야 합의안이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2022년 12월 23일

NEWS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17개의 세법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방세 관련 4개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심사 중으로 정기회 및 임시회 기간에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득세제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등이 있다. 법인세제는 법인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인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이 있다. 자산세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 및 세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있으며, 소비세제는 간이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다자녀가구의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 있다.

본 보고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주요 항목별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소개해 2022년 개정된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 대리 이신우)는 ‘마주한 위기, 열어갈 미래: 용기있게 의연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새해의 30개 주요 국가 현안을 선정해, 특별보고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로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여러 과제를 풀지 못한 채, 국제·정치·경제적 갈등 격화와 가파른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2023년 새해를 맞이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의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인 입법조사관들이 30개 국가 주요 현안을 선정해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삼중고 속 한국경제’,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과제’ 등 6대 대분류 하에서 각각 5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해 총 30개 현안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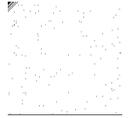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점연구 및 수시과제 수행을 통해 30개 주요 현안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 ‘미래칼럼’ 연재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3년 1월 19일부터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 ‘미래칼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월 기고자로 미래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칼럼은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인 ‘뉴스1’과 공동으로 기획해 연재 중인 콘텐츠로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필진으로 두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국회의원을 필진으로 확대해 입법부의 미래지향적 시각 또한 반영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은 오는 3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정보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월 필진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



이달의 청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2020년 1월에는 기존의 의원소개청원 외에 전자청원인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신설했다.

국민동의청원 도입 이후 국회청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회민원지원센터는 이러한 인지도 제고를 기반으로 국회청원이 국민과의 소통 및 공론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튜브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의원소개청원 1건이었고 국민동의청원은 없었다. 1월 6일 김태년 의원 소개로 제출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상 토지수용 보상 재산정 기준의 개정으로 토지보상금과 택지공급가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해 원주민이 살던 땅을 헐값에 팔고 이주자 택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행 공공택지 조성원가 재산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1월에 성립된 것은 없었지만

225건의 청원서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됐고 현재 27건의 청원서에 대해 동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 27건의 국민동의 현황(23. 1. 20.기준)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청원’(동의수 20,484명),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동의수 16,348명),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요진빌딩 이전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에 관한 청원’(12,038명) 등의 순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동의진행 중인 청원서에 대해 의견제시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하지만 동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청원인이 보다 많은 국민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청원을 홍보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에 청원인이 자신의 청원을 홍보하는 동영상 제작해 게시할 수 있도록 ‘(가칭) 동의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홍보영상 게시’를 추진 중이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국민동의청원 진행사항 등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회민원지원센터

청원제목	청원자(소개의원)	소관위	접수일	구분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	나종호 외 18인(김태년 의원)	국토교통위	1. 6.	의원소개청원

내 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 2023.1.1.]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자립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현황 등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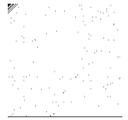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에 대해 윤성노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까지다.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돼 연말정산 시 돌려받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연말정산으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로선 일석이조인 셈이다.

또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 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기부도 불가하다.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하면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부금 추정 규모는 연간 576



억~7천7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답례품 시장 규모도 172억 원에서 2천33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상품권이나 관광·문화예술 콘텐츠 등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기부 및 세액공제 가능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전국 5천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각계에서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1월 10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 김 지사와 이 지사는 각각 NH농협은행 전남도청지점과 NH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 홍보대전’

농협은행 경북본부를 방문해 500만 원을 상대 지자체에 기부했다. 축구선수 손흥민도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고향사랑e음’을 통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춘천시의 답례품은 닭갈비와 옥비누, 레일바이크 탑승권 등 26개 품목이다.

한편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반갑지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답례로 줄만한 마땅한 지역 특산품이 없는 서울의 자치구들이 그렇다. 신당동 떡볶이, 왕십리 곱창, 마장동 쇠고기 등 특정 지역과 연관된 먹거리나 가공품은 있지만 이를 서울의 특산품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답례품은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상품권)’과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으로 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답례품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생산 기반을 두고 있는 상품을 특산품으로 본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답례품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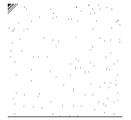
글 고영선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제사법위원회 2022-12-7 의결
본회의 2022-12-8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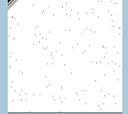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클라우드

어느새 클라우드 세상에 살고 있다

접속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공유 경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유연한 과금 방식, 용량의 증설이 즉시 이루어지는 컴퓨터의 구현과 같은 내용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상용화된 지 오래됐다. 지난 세기에 컴퓨터를 만들어서 황금기를 보내며 안주했던 IBM, HP와 같은 글로벌 컴퓨터 제조 기업들은 어느덧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IT서비스 비즈니스를 하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진에 가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KT, 네이버, SDS 같은 기업들이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경쟁에 뛰어 들었다. 다수의 저렴한 컴퓨터를 연결해 클라우드를 구성하면, 여러 사람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접속해서 일을 보면 된다.

이제 누구나 컴퓨터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개인적인 물건이어서 공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 접속한 개인용 컴퓨터는 본인이 허용한다면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에게 접속을 허용해서 컴퓨터 교육용으로 쓸 수도 있다. 클라우드가 IT의 공유 경제를 표방해 가능한 일이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핸드폰은 개인용 컴퓨터보다 더욱 개인적인 물건이다. 사용 중인 핸드폰에 들어있는 정보를 새 폰으로 옮기려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무거운 데이터들이 수십 기가바이트의 용량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 용량은 1990년대에 금융권에서 사용했던 대형 컴퓨터의 저장 용량과 맞먹는다. 클라우드의 사용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핸드폰 교체에 필요한 시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핸드폰의 자료들도 손쉽게 클라우드에 저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에는 핸드폰 속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고,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상 복구가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클라우드 기술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에는 대중적인 이유가 있다. 경제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컴퓨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이유로 컴퓨터가 필요할 때 100만 원 정도의 컴퓨터를 사야 하는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근처에 있는 PC방에 가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약간의 비용만 내고 쓰면 된다. 클라우드에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어서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전자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컴퓨터 장비를 구매하려면 주문에서 제조를 거쳐 수입하는 절차까지 길게는 수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현재 대개의 대기업이나 정부부처의 업무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신속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 요건들이 무르익어가는 중이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클라우드 속에서 가능해진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협업이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동시에 열어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클라우드 속에서 함께 일하는 기능이 구현된 것이다.

네트워크 기술은 인터넷으로 세상을 연결했고, 그 위에 만들어진 클라우드에서는 실제 일들이 처리된다.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기업들은 전산실이라는 개념이 없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클라우드에는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생겨났다. 거의 모든 기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클라우드에 들어가면 공공, 금융, 유통과 같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 경제의 개념에서 보면 공유오피스에서 필요한 자리를 예약해서 사용하면 전용 사무실이 필요 없어진다.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는 시스템들은 클라우드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회의가 필요하다면 줌 같은 협업 툴을 이용하면 이동해서 모일 필요 없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진다. 이젠 회사라는 곳은 고정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클라우드 밖에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클라우드 속에서 일하고 있다. 🌟

글 김동철 공학박사, 메타넷티플랫폼 고문



내가 행정부 대신 국회에서 일하는 이유



조재순 보좌관
강훈식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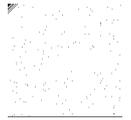
제21대국회가 개원하면서 각 의원실에서 보좌진 채용 공고가 많이 났습니다. 당시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강훈식 의원님이 보좌관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국회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무적, 정치적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의원님을 모시고 싶었던 터라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이라 산업, 경제 분야가 낯설지 않은 저로서는 더욱 반가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의원님 면접 등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강훈식 의원님의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Q. 국회의원실의 업무와 보좌관님이 하고 계신 일이 궁금합니다.

보좌관으로서 정책과 법안 입안, 예산 검토, 당 관련 업무, 공약과 지역구 관리, 공보, 홍보 등을 총괄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헌법기관이자, 헌안에 목소리를 낼 때 언론이 집중하는 정치인이기에,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기획하고, 언론에 홍보하는 과정들을 총지휘합니다.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언론 인터뷰의 기초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공약이 이행되도록 관련부처,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일도 합니다. 물론 업무의 종류와 비중은 의원님의 관심사나 국회와 당의 직책,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달라지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위원장을 맡으셨을 때는 균형발전을 중

Q. 국회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21대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행정부처 공무원이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정책, 소비자 정책을 입안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입법부와 정치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20대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기도 했죠. 국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끝이자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 국회라는 공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더 고민하게 되고,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의 대표가 된 후에는 스타트업들을 만나 필요한 법안과 정책에 좀 더 몰두하는 식이지요.

Q. 국회의원 못지않게 보좌진도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점은 무엇이고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보좌진은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직업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좌진이 ‘힘들지만 재미있어서’ 국회에서 일한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역동적인 국회 보좌진의 업무가 좋습니다. 발의된 법안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국민이 반응하고 공감해 줄 때,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여야 간의 입장 차를 조금씩 좁혀 나가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강훈식 의원님이 제21대국회에서 산자위 여당 간사와 보건복지위(복지위) 야당 간사를 연달아 맡게 되셔서 보좌진으로서는 운 좋게도 여야 간 협상의 한가운데 서 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선거와 달리, 정치는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의 예술임을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지요. 힘든 점은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신속히 정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사고가 많고요. 합의된 상임위 일정이나 심사 내용이 갑자기 파기되면 다시 또 지난한 협상 과정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2년 전 여름, 지역에 갑자기 큰 홍수가 났는데, 동네마다 수해복구에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도움을 요청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검토해서 정부에 촉구하다 보니 2-3일이 훌쩍 가더라고요. 예정됐던 여름휴가가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Q. 강훈식 의원실에서는 지난 연말 특별한 일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착한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의원님이 산자위에서 복지위로 자리를 옮기신 후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를 파악할 때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알고 있는 바로 그 기관이지요.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가 유명하지만, 직장에서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매달 기부하는 ‘착한일터’라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는 소식은 많이 봤는데, 하나의 직장이기도 한 국회의원실이 착한일터에 가입한 적은 왜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님과 직원들을 설득해 매달 급여 일부를 기부하기로 하고 국회의원실 1호로 ‘착한일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려진 귀여운 현판도 달아주는데 다른 사무실에서도 착한일터에 가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기부하는 문화가 국회에서도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앞으로의 국회 생활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정치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회의원실도 사실은 하나의 직장입니다. 의원님과 보좌진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의 팀으로 공동의 목표를 찾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즐거운 공동체로서의 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길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예측불가’가 만들어내는 국회 생활에 지지하지 않고 즐겁게 임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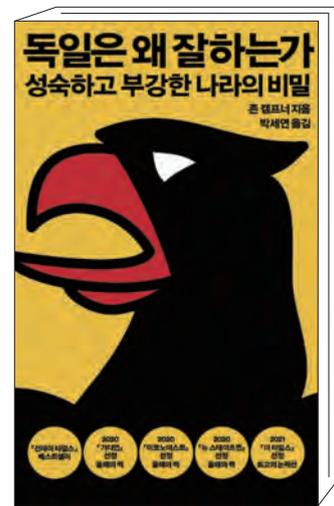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독일은 왜 잘하는가 성숙하고 부강한 나라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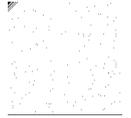
‘독일은 왜 잘하는가: 성숙하고 부강한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제로 번역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독일인들은 왜 더 잘하는가(Why the Germans do it better)’이다. 원제가 암시하듯이 이 책은 존 캠프너라는 영국 출신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오랜 시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관찰한 독일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영국과 비교, 관찰하면서 독일의 다른 모습을 발굴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캠프너가 보기에 독일인들이 잘 할 수 있는 토대는 역사에 대한 심도 깊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로 기억해내려는 ‘병적인’ 노력에 있다.

물론 독일이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않은 않았다. 캠프너는 전후 독일이 역사를 직시하게 된 과정을 추적한 뒤 오늘날 독일 사회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시민의 용기(Zivilcourage)’에 주목한다. 이 용기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아니요’라고 외치며, 용기 있게 저항하도록 교육하고 권장하는 것이다(82쪽). 미국의 트럼프, 영국의 존슨,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비극에 비해 독일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건강한 이유는 바로 이 ‘시민의 용기’에 기반



저 자 존 캠프너
역 자 박세연
출판사 열린책들
출판일 2022. 5.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너는 독일인들이 정치적으로 잘하는 이유를 합의와 타협을 지향하는 정당정치가 작동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십이 존재하는 데서 찾는다. 전후 정치적 안정의 근간이었던 거대 정당들, 즉 기민련과 사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독일인들은 광범위한 연정이라는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21세기에도 여전히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기민련(후), 사민당(적), 녹색당(녹)과 자유당(노랑), 그리고 주 차원에서는 좌파당(보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색깔의 연정이 만들어진다.

정책 입안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많이 살펴보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토론하는 문화도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거기에다 메르켈 전 총리처럼 결코 뽐내지 않고(144쪽), 외교적으로 신중하며(92쪽), 포용적이지만 필요하다면 단호한 결정을 하는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도 독일인들이 정치를 잘하는 이유일 것이다.

캠프너는 대외 정치적으로 독일이 미국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아이의 역할에 만족했지만 이제 그 시절이 끝났음을 강조한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트럼프가 자유세계의 소중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허물었으며, 도버 해협 저편에서는 보리스 존슨이 브렉시트의 완성과 함께 유럽연합을 뒤흔들었다.

유럽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258쪽). 미국과 영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독일은 자유민주주의의 리더라는 대단히 불편한 자리를 떠맡게 되었다(260쪽). 캠프너는

유럽의 중심으로 부상한 독일이 유럽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향후 대외정책에서도 솔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의 전후 경제 기적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런데 독일 경제의 성공담은 팬데믹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벌써 수년째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 세계챔피언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 독일은 유럽의 생산 체인에서 두뇌와 심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노동조합을 적으로 낙인찍고 탄압에 열을 올리는 국가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노동자들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독일의 공동경영이 생산성 상승은 물론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274쪽). 독일의 노동자들은 이사회 회의실에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며, 많은 독일 사장들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272쪽).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연대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임을 독일은 잘 보여준다. 캠프너는 제조와 공학, 수출, 탄탄한 공적 금융, 첨단 기술, 사회적 연대가 독일이 경제적으로 잘하는 이유임을 강조한다(275쪽).

이 책은 물론 사회과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저술이 아니다. 제도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 독일의 장점이 분석되기보다는 주로 저자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독일인들이 잘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독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딱딱하지 않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하겠다. 🍷

글 구춘권(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충무공 이순신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조선 22대 왕 정조(1776~1800)는 참으로 위대한 군왕이었다. 정조가 아니었다면 성웅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위대한 삶과 역사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었겠는가. 우리 민족의 고전 중의 고전이자 국보 중에서도 최고의 국보인 '이충무공전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200년 뒤에야 정조의 어명으로 나라에서 편찬하여 간행한 책이다. 불출세의 애국자요 천하에 뛰어난 장수인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그대로 탈초되어 간행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책은 국보 중에서도 국보임을 넉넉하게 알아볼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나라 역사인물로 그래도 많이 알려진 분이다. 교과서에는 말할 것 없이, 소설로 영화로 사극으로 충무공을 알게 해주는 기록이나 영상물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긴 전쟁 동안 일기로 기록한 '난중일기'나 그가 남긴 유문이 담긴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많지 않다. 원본이야 순전히 한문으로 된 책이니 일반인들이 읽기에 쉽지 않지만 번역본이 있으니 큰 불편 없이 읽을 수 있다. '이충무공전서'는 정조의 어명에 따라 당대의 석학들인 홍계희·유득공 등의 지혜가 합쳐져서, 넉넉한 출간비용으로 조선의 책으로는 으뜸가는 글자와 종이 등을 사용해 최고의 책으로 제작됐다.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후, 책의 간행이 완료된 정조 19년(1795)까지는 무려 2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그동안 이순신에 대한 국가적 포상과 예우는 부족함 없이 이루어져, 충무공이라는 시호도 내리고 좌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이 증직됐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충무공의 유문이 모아지지 못했고, 난중일기가 간행되지 못하고 있었기에, 여기에 마음을 기울인 정조는 벼슬도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직책으로 증직하고 국가에서 거금을 들여 이순신의 유문과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함께 모은 전서(全書)를 간행하여 성웅 이순신의 공과 업적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했다. 정조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책을 펴보면 책을 간행하라는 정조의 윤음(綸音)이 맨머리에 실려 있고, 국왕 정조가 손수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을 다음에 실고 있다. 충무공에 대한 정조의 숭모정신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바로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 백성과 나라를 그렇게도 사랑했던 정조, 몸을 바쳐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친 애국자 이순신을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관계되는 기록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찾아내서 활자본 14권 8책의 거질을 간행했다. 이 책 하나면 임진왜란의 해전은 완벽하게 알아볼





수 있고, 이순신의 애국심, 학문, 인격, 사람됨 모두를 알아보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애국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책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한산섬 시조 1수, 한시 4수, 이원익·유성룡 등에게 보낸 서간문 9편, 잡문 3편, 왜란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순국하던 전날까지 7년 동안의 난중일기는 천하의 보물이며, 당시 전황과 전세를 임금께 올린 장계(狀啓) 71편이 이순신의 유문이다. 본인의 유문 이외에 관계되는 자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전쟁이 끝나자 이순신의 공적을 기리고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해 전쟁의 유적지마다 세운 비문이나 관계기록, 각지의 사당에 관계되는 기록 등은 이순신에 대한 공적이나 찬양에 대한 내용이 많아 이순신의 평전에 가까운 글이다. 특히 이순신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한 최유해(崔有海)가 지은 이순신 행장(行狀)과 이식(李植)이 지은 시장(諡狀)은 이순신에 대한 기본 자료로서 그의 삶과 업적을 제대로 밝혀주는 글이다.

위대한 애국자 이순신을 찬양하고 숭앙하는 글은 그냥 적당히 지은 글들이 아니다. 당대의 석학이자 대문장가들이 자신들의 문장력과 학식을 총동원하여 가장 바르고 옳게 이순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자이자 대문장가였던 영의정 이항복(李恒福), 우암 송시열(宋時烈),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판부사 이이명(李頤命) 등의 비문이나 기문이 17편이고, 제문이나 조시(弔詩) 등이 36편으로 모두 당대 최고 학자나 문장가들의 글이다. 이런 정도의 인물들이 가장 정확하게 이순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렸으니, 그 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도

그냥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을 사랑하고 우리 나라 인물들을 존경하는 일에 인색하다. 외국의 문물을 좋아하고 외국의 인물을 존경한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학자인 퇴계나 율곡도 존경하고 숭앙해야 한다. 문무의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가장 뛰어난 전략가이자 장수로서 임진왜란의 승리를 이끈 이순신을 존경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광화문 네거리에 세워진 충무공 동상, '이충무공전서'를 제대로 읽어 이순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숭배해야 하리라.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라며 절박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신 성웅! 제대로 알기 위해 그분의 책을 읽지 않으면 안된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은 일본인 등쌀에 충무공을 제대로 현양하거나 업적을 기릴 수가 없었다. 다행히 해방 이후 이은상 등에 의해, 충무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충무공전서'도 번역되어 나왔다. 이곳 저곳에 동상도 세워졌고 '현충사'가 성역화되면서 여러 행사도 다채롭게 이뤄졌다. 고전 중의 고전으로 여겨 책의 해제를 썼던 분도 이은상이었다. 이은상은 해제 말에서 "충무공은 한갓 개선장군으로서만이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대이상 구현자(大理想具現者)요, 인간으로서 대인격 완성자인, 실로 거룩한 인물이었던 점에서 우리의 특별한 연구대상이 되는 분인만큼, 그의 인간됨을 알기 위해서라도 전서(全書)는 귀중한 문헌이 되었다"는 평을 남겼다. 그렇다. 참으로 귀한 문헌이 '이충무공전서'다. 문헌으로만 보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읽어 그의 애국심을 배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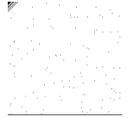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신시’에 담긴 생명 평화의 서사



이철량, 신시(神市), 종이에 수묵담채, 135×135, 1996년



“환인의 아들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인솔하고 태백산에 와서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개국하였는데 그 나라 이름을 신시(神市)라 한다.”

단군신화를 담은 역사서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태초에 하느님이 바람과 비와 구름을 몰고 태백산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큰 뜻을 담아 나라를 열었으니, 그 이름 신시이다. 신시(神市)는 신의 나라다. 그것은 천국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그 천국은 하늘이 아닌 땅에 존재하는 지상천국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어느 민족이건 개국 신화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조선의 개국 신화는 이처럼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하는 천지인(天地人)의 개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위대한 이념을 도출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 얼핏 보아 인간중심주의 사상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 자연과 인간을 관통하는 우주적 사유가 존재한다.

고대 신화 통해 현실과 이상향의 간극 메우고자 한 ‘신시’

이철량이 자신의 작품 연작을 ‘신시’라 이름 지은 것은 바로 이러한 우주적 사유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시’ 연작은 혼돈의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 사회가 격변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대학에 자리잡고 민주화 운동의 혼란기를 겪고 있었다. 그는 당시의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혼돈 이전의 평화를 갈구했다. 그것은 단군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신시의 이상향이었다. 신화의 출발점은 인간을 못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천지인 삼재 사상이었다. 자연과의 연결 없이 인간은 우주적 존재로서 실존할 수 없음을 설파한 고대 신화를 통해 이철량은 현실과 이상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법을 깨쳐나갔다.

그는 자연현상 속에서 신시의 단초를 잡아냈다. 이 그림이 담고 있는 회화적 요소는 점과 선이다. 화면 전

체를 채우고 있는 점과 선들의 연쇄는 전형적인 추상미술의 어법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역동이 들어있다. 그것은 풀이나 나무와 같은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울동을 가지고 있으며, 무수히 반복하는 짙은 먹과 옅은 먹의 반복을 통해 수많은 존재들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얽혀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점과 선의 언어를 이용한 조형실험인지, 아니면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한 서사인지는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과 나무가 하나인 세상, 나는 인간의 본성과 그 창조적 세계는 자연물의 존재성과 같이 보고 있다.”

점과 선의 조형언어를 생명의 서사로 연결

자연과 인간을 일체(一體)로 파악하는 것은 서구적 세계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전통적 세계관의 가르침을 토대로 점과 선의 조형언어를 생명의 서사로 연결하고 있다. 이철량은 1990년대 초중반에 걸쳐 이러한 유형의 연작들을 발표했다. 당시 완주의 시골 마을로 이주해 전원생활을 시작한 그는 주변의 자연 이미지를 작품 속에 녹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80년대까지 치열하게 전개해 왔던 수목화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하는 과정이었다. 수목화운동이 수목의 언어 영토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그 이후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수목으로 더 넓은 서사의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었다.

기실 1970년대까지 수목화는 동양화라는 개념 틀에 묶여 있었다. 동양화는 일본제국주의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주로 채색화 계열의 작품들이 주류를 차지했으나, 해방 이후 왜색 탈피를 명분으로 채색화보다는 수목화가 동양화를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렇게 주류를



의원회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이철량의 '신사'

점령한 수묵화 계열의 동양화는 전통의 수묵산수를 계승 발전시키며 자리를 잡았으나, 동일한 소재나 주제의 동어 반복, 예술적 비판정신이 결여한 회화술 일변도의 작품 태도 등으로 인해 점차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멀어져갔다. 수묵화운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부터 나왔다.

1980년대에 벌어진 수묵화운동은 수묵이라는 매체를 대상물의 재현적 표현의 매체로만 사유하던 것을 넘어 수묵 자체의 매체적 특성에 대해 탐구해 들어가는 내재율의 조형실험이었다. 수묵화운동은 198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계를 뒤흔든 강렬한 미술운동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수묵화라는 하나의 장르를 산수화나 인물화와 같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게 만든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채색화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미술운동과 더불어, 수묵화를 하나의 현대미술 장르 개념으로 재설정한 미술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전통 미술은 동양화라는 일제 잔재의 틀을 넘어 한국화라는

새로운 미술 개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수묵화운동 통해 한국화라는 새로운 미술 개념 획득

수묵화운동의 핵심 당사자였던 이철량은 신사라는 신화를 통해 새로운 서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생명 서사를 펼쳐오던 그는 근작들에서 동학의 개혁사상을 담아내고 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못 생명이 어우러져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화적 서사에 담겨 있는 이상향이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철량은 단군신화에서 동학의 개혁사상에 이르는 우주적 영성을 탐구하고 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적 사유를 바탕으로 생명과 평화를 서사로 펼치는 일. 그것은 짧은 날 일궈낸 수묵의 언어실험을 우주적 서사의 지평 확장으로 이어내려는 예술가의 일생을 관통하는 굵은 심지 같은 것이다. 🍵 글 김준기(미술평론가·광주시립미술관장)

함박눈이 내린 국회의사당



함박눈이 내린 국회의사당에 겨울 정취가 가득합니다.
혼자만 보기에 아까운 풍경이어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 2023년 1월 최장현(서울 강서구 가양동)

전염병, 제헌국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코로나19 발생 이후 네 번째 맞는 2월이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 본회의에서 일명 코로나 3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 없이 의결한 것을 필두로 추경예산안 및 관련법들을 처리해왔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전염병¹⁾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에도 전염병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왔다. 그렇다면 제헌국회 2년 동안 제헌의원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했을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이 글은 시작됐다. 이하에서는 제헌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보건부 독립·신설

제헌국회 제1회 제29차 본회의(1948. 7. 14.)에서 우리나라 제1호 법률인 ‘정부조직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영준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는 보건후생부가 독립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음 날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보건후생부의 독립 설치 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표결했으나 부결(재석의원 185, 가 65, 부 95)되었다. 따라서 보건후생부는 따로 신설되지 않았고 보건·후생 업무는 사회부 내에 분장되었다.

이후 제2회 제35차 본회의(1949. 2. 19.)에 ‘보건부독

립에관한청원안’이 상정되었다. 이영준 의원은 ‘결핵, 나병, 천연두, 기타 급성전염병의 예방대책’ 등의 처리를 위해 당시 사회부의 1국인 보건국을 보건부로 독립해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청원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염병에 대한 국내 상황 설명 시 결핵의 높은 사망률 등 통계수치도 인용했다. 동 청원안은 찬반 토론 후 표결에 부쳐 가결(재석의원 129, 가 67, 부 31)되었고, 이에 따라 1949년 7월에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제헌국회 제2회 제35차(1949. 2. 19.) 본회의>

1. 보건부독립에관한청원안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

또 서울시의 통계를 보면 현재 서울시 학생수의 60%, 100명 가운데에 60명이 다 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만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농촌을 다해서 분명히 이 신체를 35.0 이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의 백성은 절반밖에 못 산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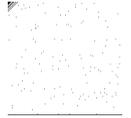
(……)

다음에는 결핵의 사망률을 몇 가지로 보면 인구 100만 명에 대해서 죽는 수가 부라질이 272.6 한국이 250.0 미국이 45.8, 검사를 한다고 할 지경이면 100명에 60명, 6할이 결핵이 되었습니다.

본회의 연기

제헌국회 제5회 국회는 대통령(이승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었는데, 개회식(1949. 9. 12.)에서 신익희 의장은 다음 날 개최 예정인 1차 본회의를 당시 만연되고

1) 2009년 12월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감염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시대에 맞게 서술된 ‘전염병’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1주일 연기한다고 선포했다.

<제헌국회 제5회 (1949. 9. 12.) 본회의 개회식>

○의장 신익희 (……) 우리는 오늘 개회식을 거행한 다음 내일부터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의외에도 지방 각지에 만연되고 있는 전염병이 있는 까닭에 학교나 극장이나 모든 가지 공공집회 하는 것이 임시로 다 제한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시급히 처리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공공위생을…… 특히 전염병 뇌염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수의 의원이 모일 뿐 아니라 날마다 모이게 되는 방청석의 인원들도 많게 되는 까닭으로 이 오는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시하기로 하고 이 주일, 토요일까지 휴회하기로 오늘 아침의 의장의 의사도 그러려니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동지들과 같이 다 토의된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 드리면서 아마 곧 정식으로 공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외국인 입국 제한

제헌국회 제5회 제17차 본회의(1949. 10. 10.)에 정부(당시 외무부)가 제출한 ‘외국인 입국출국 및 등록법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 제정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입국 또는 출국이 과도정부 때의 ‘남조선과도정부법령’과 ‘동외무처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서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동 법안은 제5회 제18차 본회의(1949. 10. 11.)에서 의결되었고, 그 후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로 법명이 수정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50년 1월 7일부터 ‘전염병 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한 자’에 대해 외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제헌국회 제5회 제17차(1949. 10. 10.) 본회의>

3. 외국인 입국출국 및 등록법안

○외무국방위원장 지대형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그 등록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무부에서 제출한 것인데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

○김경도 의원 아까 질문 때에도 간단히 여쭙았습니다만, 제6조는 입국하기 전에 거절하는……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한다든지 경제를 교란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벌써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케 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염병 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한 자, 이 세 가지 3호는 당연히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선거권 제한

제헌국회 제6회 제67차 본회의(1950. 3. 31.)에서 의사국장 유성갑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선거권 행사의 특별제한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의안은 전염병 환자 및 전염병 유사 환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²⁾ 규정한 것이었으나, 이후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이상 제헌국회에서 논의한 전염병 대응 방안을 속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행정기구 강화, 전염병으로 인한 본회의 연기, 외국인 전염병 환자의 입국 제한, 전염병 환자의 선거권까지 모두 70여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오늘날의 상황과 오버랩되고 있다.

올해 2월은 인류 역사상 코로나19의 마지막 달이기를,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구와 ‘헤어질 결심’을 단행하는 달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글 조미경 속기사무관(의사국 의정기록1과)

2)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21대국회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2월 14일 본회의(제393회 제2차)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코로나19 격리자 등에 대해 투표소를 추가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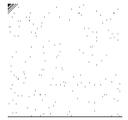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월출산 암봉들

산을 통째로 조각했나, 자연이 빚은 기암괴석의 향연

영암 월출산



적이 있다. 저 멀리 평평한 땅에서 갑자기 거대한 돌산이 불쑥 솟아오른 모습이라니, 보통의 산은 산허리를 조금씩 높여 큰 산을 이루지만 월출산은 판판한 논밭 가운데 홀로 벌떡 서 있으니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풍경이다.

월출산(月出山)은 높이가 809m에 불과하고 면적(41.88km)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작다. 하지만 명산의 족보를 따질 때면 그 어떤 산에도 뒤지지 않는 명성을 자랑한다. 지리산, 천관산, 내변산, 내장산과 더불어 호남의 5대 명산에 꼽히며, 설악산, 주왕산과 함께 한국 3대 바위산으로 불린다. 금강산이 보고 싶으면 전남 영암 월출산에 가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산위를 오르며 끝없이 마주치는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괴석들을 마주하면 그야말로 천하절경이 따로 없다.

월출산(月出山)이란 이름을 직역하면 ‘달 뜨는 산’이다. 옛사람들은 달빛을 받아 빛나는 월출산을 최고의 풍경으로 꼽았다. 조선 전기의 방랑시인 김시습은 “남도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이 하나 있으니, 달은 푸른 하늘에 뜨지 않고 이 산을 오르더라”라며 월출산 달 뜨는 풍경을 예찬했다. 영암 출신 가수 ‘트로트 여왕’ 하춘화는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둥근달이 뜬다 월출산 천황봉에 보름달이 뜬다’라며 ‘영암 아리랑’을 노래하기도 했다.

호남에서 제일가는 그림 같은 산

월출산 정상으로 향하는 탐방로는 여럿이다. 보통 천황사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바람폭포-통천문-천황봉-사자봉-구름다리-천황사를 거쳐 원점회귀하는 6.6km 코스를 많이 택한다. 4-5시간 걸리는데 책바위, 육형제바위, 구름다리 등의 명소를 두루두루 볼 수 있다. 짧게 구름다리만 보고 오는 코스도 많이 찾는다. 왕복 2시간 거리이지만 월출산 최고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6시간 넘게 걸리는 종주코스(9.4km)도 도전해 볼 만하다. 정

전라남도 영암(靈巖)군의 지명을 풀어보면 ‘신령한 바위’라는 뜻이다. 신령한 바위?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영암 땅 어느 곳에서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 신령한 바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영암 제일의 보물, 월출산이 주인공이다.

너른 영암의 들판을 지나다 월출산을 보고 신기해한

상인 천황봉에서 반대편 도갑사로 하산하면 된다.

어느 코스를 택하더라도 월출산 산행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경사가 매우 급해 만만한 코스가 없다. 게다가 비슷한 높이의 산들은 보통 해발 400~500m쯤에서 등산로가 시작되지만, 월출산 출발점의 해발고도는 '제로'에 가까워 거의 1,000m급 이상의 산을 오르는 수고를 요한다. 또 완전한 능선이 없고 대부분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뤄진 봉우리들이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다. 국내 산 가운데 난이도로 치면 최상급이다. 그럼에도 밭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다른 산에서 볼 수 없는 월출산만의 매력기 넘치기 때문이다. 산행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한 번은 꼭 올라야 할 숙제와도 같은 곳이다.



바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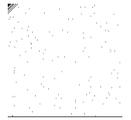
산행은 초입부터 험준하고 가파른 바윗길 오르막이 시작돼 금세 숨이 거칠어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왼쪽은 천황사를 거쳐 구름다리로 오르는 능선길이고,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바람골로 향하게 된다. 두 길 모두 천황봉을 밟을 수 있지만, 구름다리 쪽은 경사가 급해 지치기 쉽다. 바람골 쪽으로 올라 정상을 밟은 뒤 구름다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 천황사로 내려오는 것이 좀 더 수월한 편이다.

바람골로 들어서면 협곡 사이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 군상들이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멀리 하늘에 떠있는 듯한 구름다리도 보이고,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린 책바위와 여섯 개의 바위가 열 맞춰 뽀족하게 솟은 육형제바위도 만나게 된다. 오르는 중간중간 되돌아본 영암의 너른 들판 풍경은 정겹고 푸근하다. 가파른 길을 계속 이어가면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바위굴 통천문을 만난다. 길은 외길이다. 아슬아슬 이 문을 통과해야만 천황봉에 다다를 수 있다. 통천문을 지나 계단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드디어 정상인 천황봉을 만나게 된다.

천황봉에 서서 사방을 바라보면 왜 월출산을 두고 거대한 예술작품이라고 감탄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이 빚은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신비롭다. 수석 전시장 같은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마치 솟씨 좋은 석공이 산을 통째로 조각한 듯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한다. 바위 능선이 실핏줄처럼 사방으로 뻗어 그려낸 장쾌하고 독특한 풍광은 월출산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풍경이다. 멀리엔 영암의 들판과 그 너머로 아스라이 펼쳐지는 강진만이 눈에 들어온다.

아찔한 구름다리, 신선계로 향하는 길

천황봉에서 구정봉(711m)으로 이어진 바람재 쪽으



로 내려가면 도갑사로 향하는 종주코스다. 갖가지 기암 괴석이 빚어낸 웅장한 경치에 바람도 쉬어간다는 바람재와 아홉 마리 용을 품었다는 구정봉, 드넓은 억새밭을 가로지르는 미왕재까지 그림 같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하지만 원점회귀하려면 천황봉에서 발길을 돌려야 한다. 하산길은 구름다리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 코스는 힘들다는 월출산 코스 중에서도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신줄을 바짝 당겨야 한다. 철제계단이 많이 깔려 있는데 사다리 수준이라 해야 할 정도로 급경사가 많고, 로프를 잡고 이동해야 하는 곳도 많다. 그래도 월출산 등산 코스 가운데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니 풍경을 위안 삼아 쉬엄쉬엄 내려가는 것이 좋다.

구름다리는 월출산 최고의 전망대다. 매봉과 사자봉 사이 해발고도 510m, 지상고도 120m의 아찔한 높이에 다리가 놓여 있다. 안개라도 끼는 날에는 구름 속을 걷는 것 같다고 해서 구름다리로 불린다. 신비로운 풍경을 두고 '신선의 세계로 향하는 길'이라고 극찬하는 이들도 있다.

구름다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벼랑이다. 아찔한 풍경에 발끝이 짜릿짜릿 오금이 저릴 정도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진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에 와있는 착각이 들게 한다. 천황봉까지 오를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구름다리를 정상 삼아서 이곳까지만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것만으로도 감동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구름다리를 건너가면 본격적인 하산길이 시작된다. 구름다리 입구 정자 앞에서 능선길을 따라가면 출발점인 천황사로 복귀할 수 있다.

외적으로 풍기는 기운이 그렇듯 월출산은 기가 센 산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지리학자 이중환은 월출산을



사자봉에서 본 구름다리

‘아침 하늘에 불꽃처럼 기(氣)를 내뿜는 산’이라는 했을 정도다. 실제로 월출산은 맥반석으로 쓰이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이다. 맥반석은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오로지 그 기운을 받고자 월출산을 오르는 이들이 많다. 코로나19에 경제난이 겹쳐 먹고살기가 팍팍해진 요즘이다. 월출산의 좋은 기를 받아 지친 심신을 위로받았으니, 조금이나마 다시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할 힘이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기대해 본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대중교통은 서울의 경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영암행 버스가 오전 오후 하루 2회 운영된다. 광주광역시 광전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영암으로 가는 버스가 자주 있다. 영암읍에서 천황사 입구까지는 군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한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서해안고속도로 → 고창분기점 → 고창-담양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장성방향) → 서광주IC → 국도 1호선(나주방향) → 나주 → 국도13호선(영암방향) → 영암 → 천황사방면 → 월출산국립공원(천황지구)으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서술어의 주체를 분명히 살피자

어느 언어나 주동, 사동, 능동, 피동이 있다. 이들이 비슷하지만 다른 문맥에서 사용되며, 나아가 의미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런 용어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 문법을 배운 탓에 많은 사람들은 영어의 능동태와 사동태를 떠올린다. 사실 우리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동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의미 전달에도 편리하다. 간혹 우리말에서 사동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투의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이다.

날씨가 추워지자 최근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공문이 자주 온다. 늘 공문을 받고 결재를 하는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공문은 제목만 보고 그냥 결재를 하곤 한다. 내용이 많아도 제목의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 모든 기관과 구성원들이 애를 쓰자는 것이다. 공문을 작성해서 널리 보내는 담당자 역시 이런 공문이 어찌면 제대로 읽히지도 못한 채 사라지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문 안에 쓴 문장을 보면 이전에 보냈던 것과 큰 차이도 없을 뿐 아니라 이상한 문장들이 간간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온 공문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

가. 우리 기관 구성원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1월 도시가스 및 전기사용 감축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공문의 맥락을 먼저 설명하면 이렇다. 올해 겨울이 매우 추웠지만, 구성원들이 에너지 절

약을 위해 노력해 준 덕분에 작년 1월에 비해 도시가스 및 전기사용 감축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는 것과 앞으로도 적극 이러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덧붙였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곳이 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여러 차례 읽어보면 무언가 모르게 어색한 점이 느껴진다. 우선 앞의 문장에서는 주어와 생략되어 있다. 아마도 ‘우리 기관은’이라는 의미 상의 주어가 생략되었으리라.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문제는 두 번째 문장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드러난다.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이 유지된다’는 문장이 들어있는데, 유지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이다. 에너지 절약을 유지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해야 한다. 다만 뒷부분에서 구성원이라는 주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 절약’이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두 번째 문장을 고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바꾸면 의미도 명확해져서 전달력도 높아진다. 문장을 쓰기 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정하고, 전달을 위해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동, 사동, 능동, 피동 등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짧은 글 속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다. 기회가 되면 공문서나 연설문 등 주변 글에서 예를 찾아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회 ART GALLERY 2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Byeond the landscape

2023. 2. 1. - 2. 14.

작가 : 임선옥 | 추천 : 이용우 의원실



흔적의 풍경들

2023. 2. 15. - 2. 28.

작가 : 박경진 등 4인 | 추천 : 윤영석 의원실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회견,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출범 등

1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우택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1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 명동대성당 분향소를 찾아 향년 95세로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조문
1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사고 당시 경찰 지휘부 부실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
1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세종지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지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
1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안건 의결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집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기관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유가족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장으로서 촉구하겠다”고 밝혀 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촉구
1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출범
1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밝혀
1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진표 국회의장, 8박 10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1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3당, 이태원 참사 유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1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전반의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 여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총력 지원을 약속
1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불출마 선언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 합의(2월2일~28일)

정리 윤성혜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국회방문객이 찍은 국회 사진 공모



- 주제** 국회의 풍경
- 참가자격** 국회를 방문한 사람 누구나
- 내용** 사진과 촬영이유, 사진설명
 - 국회의 풍경이나 국회를 찾은 방문객, 국회 실내 모습 등의 사진과 짧은 설명(2~3문장)
- 응모방법**
 - 휴대폰으로 촬영(촬영 날씨가 보이게)
 - 사진 및 설명, 연락처를 이메일로 제출 (book@assembly.go.kr)
- 마감** 매달 20일
- 규격**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용량의 JPG, JPEG 파일형식 원본 창작사진 (디지털 합성 등 수정 변형불가)
- 시상** 선정 시 원고료 10만 원
-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058)



- 매월 1편씩 선정하여 국회 월간지 국회보에 게재 예정.
-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선정 이후라도 표절, 타 공모전 입상작품 등 이유로 저작권 문제 발생시 선정 취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